

「노인일자리지원법 시행」과 100만 노인일자리

Vol.14

2024 SPRING

고령 사회의 생활과 일

The Life & Work in the Aged Society



Contents

권두언

02 1,000만 노인시대, 100만 노인일자리를 위한 준비와 과제

염민섭 보건복지부 노인정책관

이슈

04 노인일자리의 탄생과 의미

신권철 서울시립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10 천만 노인시대, 백만 노인일자리 정책: 기대와 우려

남기철 동덕여자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

고령사회와 노인일자리 동향

16 2024년 노인일자리 정책 추진 방향

강선명 보건복지부 노인지원과 사무관

20 2024년 고령사회 핵심 아젠다

김수완 강남대학교 사회복지학부 교수

통계리뷰

24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사업 실태조사로 본 참여노인 특성 변화

김문정 한국노인인력개발원 연구조사부 부연구위원

우리동네 노인일자리

31 스마트폰 좀 쓴다면? 보행로 정보 수집 전문가!

원신원 한국노인인력개발원 홍보기획부 차장

1,000만 노인시대, 100만 노인일자리를 위한 준비와 과제

세계적으로 가장 빠른 속도로 인구고령화가 진행되고 있는 우리나라는 2025년 65세 이상 노인인구가 전체 인구의 20%를 넘어서는 ‘초고령사회(super-aged society)’로의 진입이 예상된다. 머지않아 65세 이상 노인 1,000만 명 시대를 맞이하게 되는 것이다.

초고령사회 1,000만 노인시대를 앞두고 길어진 노년기로 인해 맞이하게 되는 ‘4고(빈곤, 무의, 고독, 질병)’에 대한 예방적 차원의 대응이 더욱 중요해지고 있다. 특히 우리나라 노인빈곤을 감안하면 노후소득보장체계 확충 및 내실화가 더 없이 중요한 시점이다. 향후 국민연금의 성숙기가 도래하고 기초연금 등 노후소득보장체계의 확충이 이루어진다면 노인빈곤 문제가 완화될 것으로 예상되지만, 단기간 내에 제도적 성숙이나 확충을 기대하긴 쉽지 않다.

노인일자리사업은 기초연금과 함께 노후소득보장정책의 일환으로 정책적 의의를 가진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 한국노인인력개발원 등의 연구에 의하면 노인일자리 참여자의 소득증가로 참여 전 대비 빈곤율(상대적 빈곤율)을 10.2%p 완화하는 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노인의 사회활동으로 건강 상태가 유지되어 국가 전체적인 의료비를 약 7,500억 원 절감하는 효과가 있으며, 뿐만 아니라, 일자리 참여 노인은 건강이 개선(74%)되고, 인간관계가 호전(67%)되는 등 우울감 개선, 삶의 질 향상 등 다양한 효과를 보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노인일자리 수는 2004년 2만 5천 개로 시작하여 2023년 88만 3천 개, 2024년에는 103만 개로 확대되



염민섭
보건복지부 노인정책관

어 지난 20년간 41배 넘게 증가하였다. 또한 금년에는 2018년 이후 6년 만에 노인일자리 보수를 공익활동형은 월 27만 원에서 29만 원으로, 사회서비스형은 월 71.3만 원에서 76.1만 원으로 7% 인상하여 노인일자리 질적 향상을 도모하고 있다.

매년 노인일자리 확충해 왔음에도 불구하고, 노인 일자리 참여를 희망하는 노인의 수요 증가를 감안하면 앞으로도 더 많은 일자리가 필요할 것으로 예상된다. 베이비붐 세대(1955~1963년생)를 포함하는 '신노년세대'(55~63, 730만 명)가 2020년부터 노년기에 진입함에 따라 노인일자리에 대한 욕구 또한 다양화되고 있어 앞으로도 양적 증가와 질적 내실화에 대한 요구가 커질 것으로 전망된다.

지난 2023년 7월 정부에서 발표한 '제3차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사업 종합계획(2023~2027)'에서 초고령사회 진입, 신노년세대의 노년기 진입 등에 대비해 2027년까지 노인인구의 10%인 약 120만 명 이상에게 노인일 자리를 제공할 수 있도록 노인일 자리의 양적 확대와 동시에, 경험이 풍부하고 역량이 높은 신노년 세대에 맞추어 사회서비스형과 민간형 일자리를 전체 노인 일 자리의 40% 이상으로 확충할 계획을 밝힌 바 있다.

특히, '사회적 약자'에 대한 지원이 필요한 곳에 노인 일 자리를 중점적으로 확대해 일자리와 복지서비스가 선 순환되는 구조를 지향하고, 독거, 거동 불편 등 취약 어 르신의 식사·가사 서비스와 경로당 어르신 여가·운동 등 고령 노인의 일상생활을 지원하는 사업단을 적극 육성 하겠다는 계획을 담고 있다. 이를 위해 경쟁력 있는 시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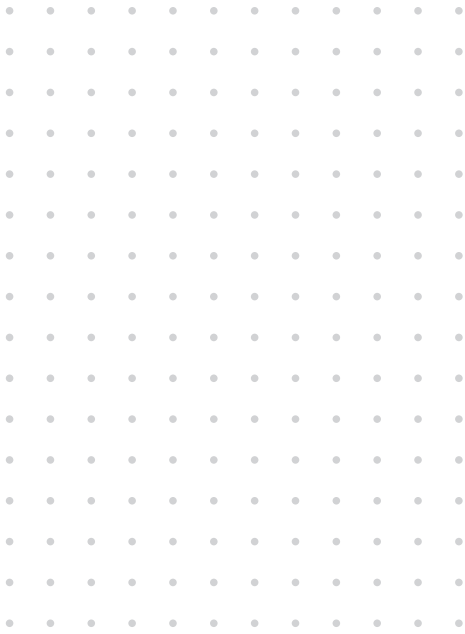
형사업단 육성에 필요한 인프라 구축 비용을 지원하는 '시장형사업단 인프라 구축 지원사업'을 추진하여 노인 의 일상생활을 지원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확대할 계획 이다.

또한, 아동·장애인 등 취약계층 지원 사업과 취약 시 설의 안전을 확보하는 사업에 노인일자리 연계를 활성 화하며, 신노년 세대가 전문성과 역량을 발휘할 수 있는 민간일자리도 대폭 확대할 계획이다. 이번 3차 종합계획 은 초고령사회 진입을 앞둔 시점에서 노인일 자리의 양 적 확대와 질적 내실화를 위한 중장기 정책 방향을 담고 있다는 점에서 정책적 의미가 크다.

3차 종합계획이 발표된 이후, 2023년 10월에는 '노인 일 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노인일자리 법)'이 제정되어 노인일 자리 추진 근거를 공고히 하고, 법적 테두리 안에서 보다 체계적이고 안정적으로 정책 을 추진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되었다. 이는 오랜 기간 노인일 자리법 제정을 위해 노력한 결과이며 노인일 자리의 정체성을 명확히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는 점에 서 매우 의미가 있다. 올해 11월 노인일 자리 지원법 시행 을 앞두고 남겨진 과제들을 촘촘히 정비하여 법 제정의 의미를 확고히 해야 할 것이다.

이번 3차 종합계획 발표와 법 제정을 계기로 노인일 자리가 노년기 소득보충과 더불어 건강하고 활기찬 노 후를 실천하는데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1,000만 노인시대 100만 노인일 자리를 통해 노인일 자 리 정책적 효과를 더욱 극대화 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

노인일자리법의 탄생과 의미



신권철
서울시립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노인일자리법의 탄생

2023년 10월 31일 노인일자리법(정식 명칭은 ‘노인 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이하 ‘노인일자리법’)이 제정되어 올해 11월 1일부터 시행된다. 2022년 6월 나는 본지 제7호에 칼럼(제목: 노인일자리법안, 시장을 넘어 공동체로)을 쓰면서 3개나 되는 노인일자리법안이 2024년 6월 국회 임기 만료로 폐기될 슬픈 운명에 처해 있다고 하였다. 그리고는 노인일자리법이 지난 10년 넘게 통과되지 않은 이유를 길게 설명하였다. 그러나 그러한 분석이 무색해지게 임기 만료를 얼마 남기지 않은 국회에서 2023년 10월 여야 모두가 노인일자리법안에 찬성(투표 의원 248명 중 246명 찬성)하였고, 2024년 봄 정부에서는 하위법령을 마련하는 데 분주하다.

2년 전에 전문가랍시고 본지의 지면을 빌려 법안이 통과되지 않을 것이라는 빛나간 예측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본지를 편집하는 분들의 배려로 다시 지면을 얻게 되었다. 이번에는 왜 법이 통과된 것일까를 다시 생각해 보고, 내가 그동안 생각해왔던 것은 하나도 포함되어 있지 않은 노인일자리법을 어떻게 키우고, 무엇을 자양분으로 하여 지속가능하게 만들지 생각해 보려고 한다.

노인일자리법의 탄생 배경과 의미

정부의 노인일자리사업은 2000년대 이후의 어느 순간부터 정치적 영역에 포섭되기 시작하였다. 이미 1991년 제정된 고령자고용촉진법(현 ‘고령자고용법’)에 의해 법의 영역에서는 고령자고용을 담당하는 고용노동부가 제도화된 역할을 지난 30여 년간 수행해 왔다. 반면에 법의 영역 밖의, 독자적 법령 없이 수행된 보건복지부가 담당하는 노인 일자리사업은 점차 그 규모가 증가하여 예산이 증가되었고, 그에 따라 다양한 사업방식을 시행하여 지역의 노인들을 끌어들이는 힘이 생기게 되었다. 이러한 예산의 증가와 참여자 및 이해관계인의 증가는 은연 중에 정치적 힘의 원동력이 된다. 거리에 노인일자리 예산이나 참여인력의 확대를 홍보하는 정당이나 국회의원의 플랜카드를 보거나 노인일자리 예산이 정쟁의

대상이 되는 것을 보면 짐작할 수 있다. 국회에서는 정부 내 고용노동부의 이견과 노인일자리법과 중첩되는 고용자고용법이 이미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야 국회의원이 사실상 만장일치로 노인일자리법안을 통과시킨 것은 노인일자리사업의 이러한 정치적 성격을 보여준다. 정치적인 것은 논리나 비판, 근거와 설득에 앞서는 결단을 요구하는 것이고, 법이 중복되든, 감당하기 어려운 예산이 투입되든, 다른 정부 부처가 반대하든 입법적 결단이 그것을 뛰어넘을 수 있게 만들어 준다. 그리고 입법 이후의 그 뒷일은 정치적, 정책적 판단과는 구분되는 법에 맡긴다. 이렇게 하여 노인일자리사업은 노인일자리법이 되었다. 이제 이 법은 탄생하였고, 정책이나 사업이 아닌 법으로서 살아가게 된다. 법은 영생불멸은 아니더라도 장기간 유지되며, 정책이나 정치와는 독립된 영역을 스스로의 힘으로 만들고, 그 기본이념과 목표에 따라 항해하게 된다.

법이 만들어졌다는 것은 이제 임의로 철회하거나 변경할 수 없음을 의미한다. 정책이 바뀌고, 예산이 끊기고, 인력이 없어도 법은 스스로 존재하며, 거꾸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로서 규정된 법의 임무를 수행하고, 집행하기 위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예산과 인력을 계속 투입하여야 한다.

노인일자리법은 아직 그 기본이념이 없다. 다만 제1조에서 그 목적을 노인이 일자리와 사회활동이라는 수단을 통해 활동적이고, 생산적인 노후생활을 영위하도록 지원하고, 이를 통한 노인의 건강과 복지를 증진하는 것이라 하고 있다. 법은 그 기본이념이나 목적이 있어야 방향이 설정되는데 노인일자리법은 사실상 그러한 방향을 가지지 못한 채 태어났다. 법이 목적하고 있는 활동적이고 생산적인 노후생활은 개인의 주관적 기본에는 영향을 미칠 수 있겠지만 미래의 방향을 이끌고 갈 만한 지향성과 법원칙을 제시하지는 못한다. 결국 2024년 11



월 시행될 노인일자리법은 자신의 나아갈 길을 모르고 있다는 것이 가장 큰 난점이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고령자고용법처럼 노인에게 직업을 가지도록 하여 고용안정과 국민경제 발전에 이바지하겠다는 고용시장에서의 시장노동을 목표로 삼을수도 없다. 오히려 그와 정반대의 목표를 노인일자리법은 가져야 한다. 그것은 바로 비시장노동을 꿈꾸는 것이다. 시혜적인 복지도 아니고, 고용 시장에서 임금을 받는 근로자가 되는 것도 아닌 노동을.

법을 어떻게 키울 것인가?

아이가 태어나면 부모는 미래를 꿈꾼다. 그것이 아이의 것이든, 자신의 것이든. 그러나 한국은 이제 세계에서 가장 아이가 태어나지 않는 나라가 되었다. 그래서 부모는 이제 아이를 통한 미래를 꿈꾸기 어렵고, 스스로의 미래를 만들어 나가기도 어렵다. 그러나 사람은 미래의 노년의 생계와 더불어 삶을 지속시킬 수 있는 관계와 일상을 계획하여야 한다. 올해 시행될 노인일자리법이 이러한 것에 도움이 될 수 있을까?

사람에 대한 지원이나 도움을 생각하면 늘 지금의 국가주도의 복지시스템을 떠올린다. 굶주린 사람이 없도록, 질병의 고통을 받지 않도록 의료와 서비스, 물품이 지급된다. 거기에는 국가의 예산이나 기금이라는 재정지원이 전제된다. 노인일자리법도 마찬가지이다. 조 단위의 예산이 투입되고, 그것은 참여노인에게 임금이나 보수는 이름으로 지급된다. 2023년 11월 보도자료에 따르면, 2024년에는 2023년보다 10% 이상 확대된 103만 개의 일자리가 제공되고 예산도 1.5조 원에서 2조 원으로 대폭 확대된다고 한다. 사람들은 예산이 없으면 노인일자리사업은 멈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노인일자리 예산은 해마다 증가하고 있다. 또한 그 예산을 늘리지 않으면 재정지원 노인일자리 숫자는 전체 노인 인구의 증가를 따라갈 수 없다.

노인일자리에서는 경제성이나 생산성 같은 것은 크게 기대하지는 않는다. 반면에 고용노동부의 고령자고용법은 고령자를 생산성이 발현되고, 요구되는 시장에 끌



임없이 진입시키려는 노력을 하지만 기대할 것이 많지는 않다. 시장이 거절하기 때문이다. 노인일자리사업도 그러한 시장을 겨냥한 사업을 마련해 놓고 있지만 노인에게 시장은, 그리고 시장에게 노인은 편하지 않은 관계이다. 사람의 생애와 생로병사를 고려해 보아도 위계질서와 장시간 노동이 요구되는 임금노동은 노인에게 적절하지 않다. 다른 노동을 상상해야 한다. 그 상상을 노인일자리법에 담아야 한다.

무엇을 자양분으로 할 것인가?

예산이 없다면 우리의 노인일자리법은 빈 껍데기가 될 것인가? 그럴 것이다. 현재 재정지원 예산의 대부분은 일자리사업 및 사회활동지원사업 참여인력의 임금이나 활동비(보수)로 지급되고 있다. 일자리(고용)는 민법에 나와 있듯이 보수와 노동(노무제공)의 교환을 전제로 한다. 그렇다면 보수의 제공방식은 무엇이어야 할까? 당연히 금전이라 생각할 것이다. 근로기준법도 근로자의 임금은 통화(通貨)로 직접 지급하도록 되어 있다. 노인일자리 사업에서 참여인력은 근로자로서 임금을 받거나



자원봉사자로서 활동비를 금전으로 받는다. 거기에는 시간과 장소의 숙박과 금전적 거래관계로서의 노동이 존재한다. 자원봉사로 보이는 공익활동 또한 그 관계를 벗어나지 못한다.

세상에서 노동과 교환되는 것이 반드시 금전만은 아니다. 가족의 식사와 요리, 아이 돌보기, 마을에서의 장례와 식사, 이웃 간의 돌봄과 품앗이는 그 교환의 방식이 호혜적·순환적이고, 그 보답은 바로 돌아오지 않을 때도 있지만 늦게나마 자신이나 자신의 가족에게로 돌아오기도 한다. 또한 그 보답이 금전적인 것이 아닌 되값음 노동이라 하더라도 그것이 돌아온다는 보장이 있을 때에는 금전적 가치와 동일한 효과를 발생시킨다.

예컨대, 현재 노인일자리사업의 공익활동은 근로자가 아니라 자원봉사자로서 노노케어나 복지시설 등에 규칙적으로 시간을 정해 봉사를 하고 그 보수로 월 29만 원(2024년 기준)을 받는다. 그 보수는 현금화되어 참여노인의 생계에 도움을 줄 것이다. 여기에는 시간과 장소에 숙박되어 생계를 유지해야 하는 근로관계로서의

속성이 남아 있으며, 예산의 한계상 그 참여인력의 자격(기초연금 수급자)을 제한하고 있다. 여기서 돈 이외의 다른 방식은 없을까?

노인일자리법은 노인일자리 외에 그 안에 자발적 봉사 성격의 노인사회활동을 포함하고 있고, 그 안에 위에서 본 공익활동을 포함하고 있다. 노인일자리법에서 적어도 위의 공익활동은 거래가 아닌 호혜적·순환적 증여관계로 전환시키는 것이 필요하다. 호혜적·순환적 증여의 예를 하나 보면 다음과 같다.

강원도의 한 마을에서는 부녀회원 중심으로 겨울이 되면 동네 어르신들에게 매일 경로당에서 점심 식사를 만들어 무료로 제공하고 있다. 그 봉사활동의 대가로 부녀회원들은 무엇이 필요할까? 돈일까? 돈이라면 부녀회원은 단시간 근로자나 배달원을 하는 것이 더 낫다. 그냥 봉사 자체일까? 일면적인 봉사라면 그것은 단발적으로 흔적 없이 사라진다. 동등한 대가를 돌려줘야 한다면 그 부녀회원에게는 나중에 나이 들어 자신도 그런 비슷한 대접을 받을 수 있는 기회를 줘야 하지 않을까? 이러한

생각이 이루어져 그러한 기회가 나중에 주어진다면 그 부녀회원은 자신의 증여(노인들에게 제공한 식사마련)를 나중에 다른 사람으로부터 돌려받는 호혜적·순환적 증여의 참여자가 된다.

그런데 복지제도에서 모든 서비스에는 수급자격이 있는 것처럼 위와 같이 돌려받기 위해서는 그 일(노동)을 했다는 증표가 필요하다. 그것은 최근에 우리가 사용하는 스마트폰 앱에서처럼 확인하고, 저장할 수 있을 것이다. 이는 현재의 노인일자리나 사회활동에서 화폐가 노동을 교환적으로 순환시키는 것이 아니라 증여로서의 노동 자체가 호혜적으로 순환하도록 만드는 것을 의미한다. 즉, 국가의 예산을 자양분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순환되는 증여로서의 자발적 노동을 자양분으로 하는 것이다.

노인일자리법은 어디를 향해야 하는가?

우리는 이미 7년 전 고령사회에 진입했고, 1년 후면 초고령사회로도 진입할 것이다. 본 잡지의 제목은 고령 사회의 삶과 일이다. 글을 쓰는 필자도 중년쯤의 나이가



되어 누군가의 가족으로서 돌봄과정에서의 여러 현실을 겪는다. 국가로서는 경제사회적 또는 인구학적 측면에서 고령사회의 현실을 접근하겠지만 개개의 가정이나 개인의 입장에서도 현실의 자신과 가족의 돌봄의 문제를 장기간 안고 지내게 된다. 지금은 초보적이기는 하지만 근로관계에서는 남녀고용평등법에서 가족 돌봄을 위한 휴가·휴직, 근로시간 단축 등이 제도화되어 있으나 크게 활성화되지는 못하고 있다.

결국 노인의 돌봄은 자기돌봄, 가족이나 이웃, 지역 사회에서의 돌봄이 아니면 요양병원이나 요양시설과 같은 시설화된 공간에서 생을 마감해야 한다. 가족은 이제 직접적 돌봄을 지속할 만큼 그 숫자가 많지 않고, 자발적으로 또는 의무적으로 그러한 돌봄에 참여할 만한 관계에 있지 않은 경우도 많다. 최후의 공간이 되고 있는 요양병원이나 요양시설 입원이나 입소도, 그 비용은 건강보험이나 장기요양보험에서 일부 충당되지만 국가와 가족 모두에게 지속가능성이 있지는 않고, 권할 만한 것도 아니다.

노인일자리사업에 대한 국가의 현실적 목적은 빈곤 노인의 생계(현금)지원일 수 있고, 실제 참여노인도 그러한 구체적 목적에 의해 참여하게 되는 것일 수 있다. 그렇다고 하더라도 노인일자리법은 참여노인의 일(노동)의 의미와 목적을 변화시킬 수 있다. 그러기 위해서는 지역 내에서 의미 있고, 가치 있는 일에 노인이 참여하면서 동시에 자신의 삶의 미래를 유지할 수 있고 신뢰할 수 있는 제도를 마련하여야 한다. 그 중에 하나는 지역 내에서 노인들이 커뮤니티를 유지하면서 삶을 마감할 수 있도록 서로 돕는 일(입원이나 진료 동행, 외출 등 활동지원, 공동 식사, 장례 지원, 말동무 등)에 노인일자리사업 및 사회활동 사업의 중심이 되도록 할 필요가 있다. 아울러 앞서 보았듯이 시간과 장소에 속박되는 형태의 일이 아니라 스마트폰 앱 등을 통해 그러한 돌봄이 서로 연결되고, 확인되고, 요청될 수 있는 시스템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노인일자리법은 지역 내에서의 노인들 사이의 안부와 안녕을 물을 수 있는 돌봄 공동체를 향하여야 한다.

천만 노인시대, 백만 노인일자리 정책: 기대와 우려



남기철
동덕여자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

지난 20년 노인일자리사업의 성장과 성과

얼마 전 제3차 노인일자리종합계획이 수립되어 발표되었고,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이 법률 제19814호로 2023년 10월 31일에 제정되었다. 20년 전인 2004년 2만5천개의 일자리 제공을 목표로 시범 사업과 같은 모습으로 노인일자리사업이 시작되었던 때를 생각하면 엄청난 성장이 이루어졌다. 약간의 굴곡이 있었지만 사업 시작 이후 꾸준히 사업량이 증가하면서 이제는 연간 100만 개의 노인일 자리를 제공하는 대규모의 정책사업으로 진행되고 있다. 여기에는 이제 내년에 현실화될 초고령사회로의 진입이라는 우리나라 인구 구조가 배경이 되고 있다. 특히 이번 노인일자리사업에 대한 독립법의 제정은 그간 노인일자리사업의 제도적 위상이 모호했던 점을 명확하게 만드는 중요한 계기라 할 수 있다. 바야흐로 천만 노인의 시대, 그리고 백만 노인일자리사업이라는 엄청난 수치를 우리는 만나고 있다. 노인일자리사업이 사업 초기부터 초고령사회 진입에 맞추어 백만 개의 노인일 자리를 제공할 수 있게 기획했던 것은 아니다. 하지만 전체 인구 중 20%의 노인, 노인 인구 중 10%의 노인일자리사업 참여라는 현재의 상황에 비추어 노인일자리사업 의미에 대해 정리해볼 시점이다. 가장 먼저 두드러지는 것은 그간 이루어진 노인일자리사업의 양적 성장과 성과에 관한 부분이다.

노인일자리사업은 2004년 시작 이후 2007년에 10만 개 이상의 규모로 성장하였고, 2009년 20만 개 이상, 2014년 30만 개 이상, 2016년 40만 개 이상, 2018년 50만 개 이상, 그리고 올해인 2024년에는 100만 개 이상의 일 자리를 제공하는 것으로 그 규모가 급격하게 성장하였다. 예산의 규모도 2004년 약 213억 원에서 2022년에는 약 2조 5,600억 원으로 100배 이상 성장하였다. 사업을 수행하는 수행기관은 처음 300여 개 규모에서 이제는 약 1,300개 이상으로, 그리고 노인일자리사업을 전담하여 수행하는 담당자는 사업초기 700여 명에서 5,500명 이상으로 늘어났다. 그야말로 엄청난 양적 성장을 가져왔다. 단지 사업의 규모만 커진 것이 아

나라 사업 유형의 정비와 지원체계의 보강도 꾸준히 진행되어 왔다.

지난 20년간 노인일자리사업과 관련한 여러 연구들을 통해 노인일자리사업의 성과 역시 실증적으로 입증되었다. 소득보충 및 빈곤완화 효과뿐 아니라 신체적 건강의 개선을 통한 의료기관 이용빈도 및 의료비 지출 감소의 효과가 확인되었다. 심리정서적 측면에서도 자아존중감이나 자기효능감의 증가, 그리고 우울감의 개선이라는 긍정적 효과가 밝혀졌다. 사회적 관계의 영역에서는 노인일자리사업에 참여함으로써 사회적 관계망의 범위나 교류를 증가시켰고 가족관계, 사회적 관계, 사회적 지지, 삶의 만족도 등 다양한 측면에서 사회적 관계의 질을 향상시키는 효과가 있다는 점도 연구들을 통해 입증되었다.

사업에 참여하는 노인 개인에 대한 부분 이외에 노인 일자리사업의 사회적 가치도 확인되었다. 지역의 공공서비스 기능의 강화, 지역사회 노인에 대한 보호기능의 강화, 교육역량의 증진, 지역환경 개선, 지역사회 안전의 증진, 사회적 자본의 확대, 세대 간 이해의 증진 등 지역사회 측면에서 긍정적 효과를 나타내고 있다는 것이 노인일자리사업과 관련된 연구들을 통해 제안되기도 하였다. 이는 노인일자리사업이 단순한 급여전달이 아니라 지역사회의 다양한 기관 및 다양한 서비스와 연계하여 추진되는 사업이면서 동시에 지역사회의 공공서비스를 제공 혹은 보강하는 내용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지난 20년간 노인일자리사업의 양적인 성장, 그리고 참여노인과 사회 전반에 미친 성과는 적지 않다. 이제는 그간 미약한 법적 근거에 의해 예산확보의 불안정성, 관련 사업들과의 비교나 통폐합 논의 등 사업의 정체성이 다소 혼란스러웠던 상황에서 벗어나는 계기가 마련되었다. 천만 노인, 백만 노인일자리사업이 본격적으로 발전하게 되리라는 기대를 가지게 한다.

앞으로 20년 우리가 맞이할 변화와 노인일자리사업

노인일자리사업이 출발하여 지나는 지난 20년간 우

리사회의 상황을 돌이켜보면 저출생·고령화의 본격화와 노인빈곤의 문제, 새로운 기술변화, 감염병에 따른 고립, 기후변화의 부각 등 엄청난 변화를 경험해 왔다. 특히 그동안 노인의 수와 비중은 높아지는데 비해 연금제도는 성숙하지 못하여 OECD 국가 중 노인빈곤이 가장 높은 수준을 기록하기도 했다. 이런 상황 속에서 노인일자리사업은 노인에게 보충적인 소득창출의 기회를 제공하고 이들이 사회경제활동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큰 역할을 수행해 왔다. 그 이전부터 빈곤의 문제만이 아니더라도 노인들의 경륜과 능력이 사회를 위해 더 잘 발휘되어야 하는 것이 사회 전체적으로나 노인 개인에게도 중요하다는 논의가 비등하게 이루어져 왔다. 사실 주변에서 퇴직 후에 (꼭 경제적 수입을 위해서가 아니더라도) 자원봉사활동이나 사회에 기여하는 활동을 자유롭게 하고 싶다는 중장년층을 만나는 것은 어렵지 않았다. 인생이모작, 노인의 사회 기여 등은 드문 이야기가 아니었다. 건강한 노인들이 늘어나면서 능력 있는 노인이 많아지는데 이들이 경제적 사회적 역량을 발휘할 기회는 그만큼 확장되지 못했던 것이 사실이다. 노인일자리사업은 이러한 점에서 중요한 역할을 수행해왔다. 하지만 그 사업 규모나 파급력에 제한이 있어, 우리 주변에서 사회기여 활동이나 일자리를 원하는 노인들의 일상적인 욕구가 노인일자리사업 참여로 잘 연결되지는 못했다.

앞으로 20년의 사회변화는 더욱 빠르고 급격한 양상일 것으로 예상된다. 가장 먼저 인구구조의 영향이다. 2023년 기준으로 0.72라는 미증유의 수치를 나타낸 출생률은 당분간 큰 개선을 기대하기 어렵기에 인구구조 고령화의 진행은 지속적으로 증가할 것이다. 그간 누적된 기저효과 때문에 아마도 국민들은 저출생·고령화의 영향을 이제부터 본격적으로 체감하게 될 것이다. 급격한 고령화는 사회의 생산성, 소비의 패턴, 복지정책에도 영향을 미칠 것이다. 베이비붐 세대의 노년기 진입이 지속되는 시기이므로 이들의 은퇴에 따른 노동시장에서 숙련노동력의 공백도 노동시장에 중요한 영향을 미칠

것이다. 현재 3,600만 명 수준인 우리나라의 생산가능 인구는 3,000만 명에 훨씬 미치지 못하는 수준으로 줄어들 것이다. 또한 베이비붐 세대의 대규모 은퇴는 사회 전체적으로 소비의 패턴, 저축과 투자행태, 부동산 시장에서의 변화를 유발할 것이다. 이러한 변화는 경제 성장과 금융시장에도 큰 변화를 야기할 것이다. 기후변화 역시 위기의 징후를 더할 것으로 예상된다. 재생에너지, 친환경기술, 지속가능한 농업 및 제조업에 대한 요구가 더욱 강해질 것이다. 소위 그린경제로의 전환은 새로운 일자리의 창출을 가져오기도 하겠지만 전통적인 산업의 방식에서는 일자리의 축소와 구조개혁의 압력이 강해질 것이다. 디지털화와 기술혁신은 인공지능, 로봇공학, 블록체인 등의 성장을 본격적으로 가속화시킬 것이다. 이러한 기술들은 생산효율성을 높이면서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을 창출하고 전통적인 산업을 새로운 모습으로 바꾸어갈 것이다.

향후 20년간 예상되는 이러한 변화가 현재의 노인들에게 익숙하고 편안하게 느껴지는 노인친화적 변화일 것으로 단정하기는 어렵다. 이슈가 되기도 했던 키오스크의 불편함과 노인들의 소외가 표면화되었던 점, 스마트폰의 보급과 함께 더욱 기승을 부렸던 특히 노인 대상의

보이스피싱 등의 문제는 기술과 사회환경의 변화가 노인의 소외를 가속화시켰던 일부의 사례들이다. 직접적인 노인의 피해보다도 노인들이 익숙하지 못한 기술적 장벽의 걱정으로 인해 직·간접적인 참여에서 위축되어 발생하는 소외가 더 큰 문제이다. 기술의 발전은 웨어러블 기기의 장착과 같이 노인의 신체적·물리적 제한을 극복하고 사회적 활동성을 지지하는데 기여할 것이라는 긍정적인 전망도 있었지만, 아직까지는 기술과 사회변화가 노인친화적이기보다는 노인들에게 장벽이 되는 경우가 더 많다. 향후의 사회변화 역시 그 자체로는 노인들의 소외를 가속화할 우려가 있다. 집중적이고 정책적인 노력이 이루어져야만 사회변화를 노인친화적인 것으로 현실화시킬 수 있다.

이와 관련하여 미래 노인정책의 패러다임으로 많이 이야기되는 것이 활동적 노화(active aging)이다. 활동적 노화의 패러다임에서는 노인인구 비중이 커졌기 때문에 단지 경제적 생산력을 유지하기 위해 노인들의 유급고용을 촉진해야 한다는 것 이상의 의미를 제기한다. 정부와 사회는 시장경제활동만이 아니라 자원봉사, 사회적 돌봄, 사회서비스 지원과 같은 중요한 사회적·생산적 활동을 노인들이 수행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체계를



구축해야 한다고 말하고 있다. 기본적으로 노인을 부양의 대상으로 보는 관점이 아니라 사회에 필요한 생산의 주체로 바라보는 것이다. 이는 노인 개인의 입장에서는 일과 활동을 통해 비단 노인의 신체적 건강만이 아니라 사회적 참여, 경제적 보장, 사회관계, 정신건강 등 다양한 삶의 모든 측면을 포괄하여 독립적이고 생산적으로 만족스러운 생활을 영위하도록 하는 의미가 있다.

노인일자리사업은 활동적 노화라는 패러다임에 가장 부합하는 정책적 수단일 수 있다. 노인일자리사업은 급격한 사회변화의 과정에서 베이비붐 세대를 포함한 노인인구가 과거시대의 노인과 달리 사회의 주류로서 활동해가도록 도움을 줄 수 있다. 지난 20년을 통해서 그 단초를 쌓아왔듯이 노인들에게 활동을 통한 사회적 기여, 일을 통한 소득의 보충을 제공하는 역할을 본격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미래 정책수단으로서도 충분한 의미를 가지고 있다. 이제는 천만 명 노인의 시대에 백만 개의 일자리를 해마다 제공하며 노인의 주체적인 활동으로 사회의 생산성을 제고하는 중추적인 노인복지정책으로서 역할이 기대되는 시기이다.

제3차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 종합계획을 통해 이런 단면을 살펴볼 수 있다. 종합계획에서는 노년기의 일과 사회참여로 존엄한 노후와 건강한 삶, 노년기의 자아실현을 달성하는 것을 비전으로 삼고 있다. 천만 노인시대, 노인인구 10% 수준의 일자리 창출, 신노년세대 수요에 대응한 노인일자리 다양성 강화, 공급혁신 및 기반 강화를 통한 지속가능성 확보를 목표로 제시하고 있다. 활동적 노화 패러다임에 입각한 노인복지정책으로서의 성격을 명확히 설정하고 있는 것이다. 단지 슬로건으로서의 선언에만 멈추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사업 참여자의 특성과 수요에 맞춘 일자리 유형을 구조화하는 방향을 제안하고 있다. 먼저 초고령 등 근로취약계층과 경제적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하는 취약노인 노후소득 보안을 위해서는 공익활동 유형의 역할을 강조하고 있다. 역량과 경험을 보유하고 있고 사회참여의 욕구가 높은 노인에게는 자아실현과 사회기여의 경험을 제공하는

사회서비스형 사업의 역할이나 취창업을 통한 자아실현에 초점을 두는 민간형 사업을 강조한다. 종합계획만이 아니라 이번에 제정된 노인일자리지원법에서도 노인이 일자리와 사회활동을 통하여 활동적이고 생산적인 노후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는 목적을 설정하고, 사업을 수행하기 위한 수행기관과 정보시스템 구축 등을 규정하고 있는데, 이 역시 노인일자리사업을 통해 활동적 노화를 구현하기 위한 구조를 체계화하는 맥락이다.

단독 법률과 종합계획에서의 이러한 방향은 이제 노인일자리사업이 대규모의 정규 정책으로서 노인들의 활동적 노화를 구현하는 실질적인 모습이 정착될 것이라는 기대를 가지게 한다. 얼마 전까지만 해도 극도의 빈곤 속에서 파지 좁은 노인의 모습이 우리나라의 유별난 특징 중 하나였고, 노인이 일을 하는 것을 본인과 가족이 궁색하게 생각하던 것이 우리사회의 일반적 분위기였다. 하지만 이제는 노인의 일과 활동을 지속가능한 사회발전의 필수적 요소로 바라보고, 이를 지원하는 우리나라 핵심적 정책이 노인일자리사업이 될 수 있다는 사회적 위상을 기대할 수 있게 되었다.

우려에서 나타나는 노인일자리사업의 과제

그러나 다른 한편으로 사회적 기대는 저절로 충족되지 않는다. 성과를 나타낼 수 있는 현실적합한 정책의 노력이 있어야만 현실화될 수 있다. 우리가 없다고 할 수는 없다. 20년에 걸쳐 점점 더 많은 노인일자리를 해마다 제공하는 과정을 반복하면서 해결해야 할 고민거리들이 우려와 정책과제로 확인되고 있다.

첫 번째로 여전히 용이하고 단순한 활동 중심인 공익활동 기반의 노인일자리사업 구조를 혁신해야 한다. 공익활동은 노인일자리사업에서 절대적인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상대적으로 노인들이 수행하기 용이한 공공활동을 편성하고 이에 참여하는 노인들에게 활동비를 지급하는 방식이라서 어느 지역에서나 가장 많은 사업량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반면, 취로사업처럼 인건비를 지급하기 위해 꼭 필요하거나 긴급하지 않은 활동을 억지

로 편성하여 집행하는 것이 아니냐는 비판도 많았다. 이는 노인일자리사업이 시작되던 시점부터 해결해야 할 정책과제로 이야기되곤 했던 부분이다. 노인일자리사업 초기인 2007년에 사업참여 지자체들에게 사업유형별로 비율을 할당하기도 했는데 그 기본적인 이유는 공익활동에만 지나치게 치우치는 사업량 때문이었다. 백만 노인일자리사업의 시점에서도 이 고민은 계속되고 있다. 오히려 공익활동의 절대량 규모가 커지면 비판의 여지도 커질 수 있는 부분이다. 간단하지만은 않은 문제이다. 특히 여전히 심각한 노인빈곤 상황 중에서도 극빈층 노인은 고연령의 후기 노인들이 많은데, 이들은 인적 자본이 취약하고 복잡하거나 어려운 일을 수행하기 어렵다. 이들에게 공익활동은 소득보충의 방법으로 여전히 중요하다. 공익활동의 수량을 줄이거나 늘리는 대응방식보다는 공익활동이 가지는 유용성과 가치를 높일 수 있도록 설계하는 것이 일차적으로 중요하다. 이는 결국 참여노인이 아니라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 노인인력개발원을 포함한 노인일자리사업 추진체계에서 공을 들여 사업내용을 고도화해야 할 부분이다. 중합계획에서도 이를 중요한 전략과제로 설정하고 있지만, 오래된 과제인 만큼 실질적 해결을 위해서는 집중적인 노력이 필요하다.

두 번째로 사회서비스형이나 민간시장형 노인일자리사업의 품질을 더 고도화시키는 노력이 추가적으로 필요하다. 사회서비스형은 특히 백만 노인의 초고령사회에서 중요하게 부각되는 사회서비스에서 대인적 서비스 활동에 노인일 자리를 접목시키고자 하는 것이다. 시대환경을 반영한 사업 유형이라 할 수 있다. 그러나 아직 우리나라의 사회서비스 관련 주요정책들과 통합성이 충분치 않다. 노인의료돌봄통합지원 혹은 지역사회통합돌봄과 같은 정책이나 노인장기요양보험, 맞춤형노인돌봄, 장애인활동지원 등 주요한 사회서비스 정책의 흐름과 사회서비스형 노인일자리사업이 따로 분리되어 개별적으로 추진되는 양상도 두드러진다. OECD의 통계를 살펴보면 우리나라는 서비스업의 고용비중이 적은 편이다. 요식업과 같은 부분은 서구 국가들에 비해 고용이 상대적으로 많



은 편이지만 사회서비스 분야에서의 고용이 특히 적어 전체 서비스업 고용 비중이 낮게 나타나고 있다. 그만큼 사회서비스에서의 일자리 확충 가능성이 높고, 이는 노인일자리사업에서도 마찬가지이다. 시장성에 기반한 민간일자리사업의 양과 수익성을 적절한 수준까지 확보해야 하는 것도 중요하다. 창업이나 지역사회에서 경제활동에 노인들의 참여기회를 실질적으로 높여야 한다. 베이비붐 세대 노인들의 경륜이나 능력을 적절한 수준으로 발휘할 기회, 그리고 보다 많은 소득을 얻을 수 있는 기회가 보장되어야 한다.

세 번째로 노인일자리사업의 유형별 적절성을 확보하고 사업성과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사업을 추진할 인프라와 인력에 대한 투자가 필요하다. 공익활동의 공공성 증진, 민간형 사업 유형의 수익성 제고, 사회서비스형 사업의 품질 제고는 기존에도 강조된 과제이지만 아직까지 달성되지 못했다. 이는 사업유형별 목표에 대한 강

조만으로 이루어지기는 어렵고 사업 수행체계들에 대한 적극적 투자를 통해서 이루어져야 하는 부분이다. 노인 일자리사업이 시작된 이래 사업량이 거의 40배, 예산은 100배 이상 성장하는 동안, 수행기관, 사업단, 담당자(전담인력)의 확충 정도는 그에 미치지 못했다. 초기에 비해 수행기관은 4배, 전담인력은 8배가 늘어나 상대적으로 미미한 확충에 그쳤다. 물론 규모의 경제 등이 작용할 수 있으나 기본적으로 전달체계나 담당인력이 각각 맡아야 하는 일자리의 총량이 늘어나면 질적 관리나 기획에서는 기대한 만큼의 보강이 나타나기 어렵다. 특히 짚어보아야 할 것은 노인일자리사업담당자(전담인력)에 대한 처우의 부분이다. 사업을 수행하는 일선 인력은 아직까지 최저임금 수준의 계약직으로 활동하고 있다. 담당자들의 열악한 활동여건 때문에, 이들은 노인일자리사업 담당자로서의 경력을 오래 가져가거나 전문성을 증진하려는 노력을 기울이는 것이 어렵다. 다른 기회가 생기면 쉽게 활동분야를 옮기는 것이 현실이다.

노인일자리는 노인에게 급여를 제공하여 소득을 보충하도록 한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다. 하지만 단지 경제적 측면만이 아니라 활동을 통해 얻게 되는 참여자의 다양한 이득과 활동의 결과로 얻게 되는 사회적 공익의 효과를 동시에 추구하고 있다. 이 때문에 같은 예산을 통해서 소수에게 더 많은 소득을 제공하기보다는 가급적 더 많은 노인들에게 기회를 주고자 해왔다. 그러다보니 생기는 문제 중의 하나가 보수라는 측면에서의 '좋지 않은' 일자리 양산에 대한 논란이다. 노인 일자리 중 최저임금도 되지 않는 수준의 활동수당을 지급하고 있는 경우가 많은데 특히 공익활동 유형의 경우가 그렇다. 단지 일자리의 경제적 속성에만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는 점에서 노인일자리가 아니라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으로 지칭하고 사회활동의 개념으로 낮은 수당의 수준을 합리화하고 있다. 급여의 수준이 다소 낮더라도 사회적으로 인정받는 공익적 활동에 참여할 기회를 많은 노인들에게 제공하는 것도 중요하다. 하지만 노인일자리사업 현실에서는 '일과 활동 사이의 긴장'이 내재해 있다

는 것은 분명하다. 지난 노인일자리사업의 발전과정에서 사회활동이라는 용어가 함께 사용되었던 맥락에는 최저임금을 제공하지 못하는 등 국가적 공공 일자리 프로그램이 근로자성을 위반하고 있다는 현실 이유가 포함되어 있었다. 노인일자리와 사회활동 양자의 속성을 다 가진다고 하면서 현실여건에 따라 일자리 혹은 자원봉사의 원리를 편하게 끌어들이 합리화하는 것은 장기적으로는 좋지 않다. 노인일자리사업 첫 해였던 2004년도 최저임금은 시간당 2,510원이었으니 당시 공익활동 노인일자리사업의 수당은 하루 4시간씩 20일간 일하는 최저임금 수준이었다. 이후 20년간 최저임금은 4배 가까이 올랐지만 공익활동 노인일자리사업 참여수당은 월 20만 원에서 27만 원으로 상승하는데 그쳤다. 현재 하루 4시간 최저임금수준으로 일한다고 가정했을 때 7월 남짓의 시급액에 불과하다. 급여의 수준을 당장 최저임금 수준으로 올리자는 것이 아니다. 긴 안목에서 노인일자리사업이 가지는 정책목표 내에 사업유형별로 달라지는 일과 활동 사이의 개념적 긴장을 인식하고 정책집행에서의 사회적합의 방향을 구체화하는 것이 필요하다. 특히 대규모 국가사업으로 위상을 명확히 하기 위해서는 일과 활동이라는 정책의 모호한 부분에 대해 정리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와 관련하여 노인일자리사업이 원래 사회적 일자리의 고민 속에서 태동했다는 점을 한번 되새겨 보아야 한다.

이러한 과제나 고민의 지점들에 대해서는 지난 연말 제정된 법과 제3차 종합계획에서도 이미 유사한 내용을 제기하고 있다. 그러나 구체적 투자를 통해 해결을 모색하지 않으면 노인일자리사업이 규모는 점차 커질 수 있지만 여전히 위상이 불안한 프로그램에 머물 수 있다. 천만 노인, 백만 노인일자리사업의 시대에 독립법의 제정은 분명 노인일자리사업의 발전에서 중요한 사건이며 하나의 이정표가 될 수 있다는 큰 기대를 가지게 한다. 그렇지만 이 기대의 구현은 노인일자리사업의 내적 정비와 투자를 통해서 지속가능한 사업발전의 토대를 만든다는 전제에서 가능한 일이다.

2024년 노인일자리 정책 추진 방향



강선명
보건복지부
노인지원과 사무관



우리나라는 2025년 노인인구가 전체인구의 20%를 넘는 초고령사회에 진입하게 되며, 우리나라 노인의 상대적 빈곤율은 2021년 37.6%로 OECD 평균인 14.9%보다 두 배 이상 높고, 일을 하는 74% 노인은 생계비 때문에 일하고 있다고 밝히고 있다.

노인빈곤율 완화 및 사회활동 참여 활성화를 위해 정부는 2004년부터 노인일자리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2004년 2.5만 개 일자리가 2024년 103만 개로 확대되는 등 그동안 많은 성과를 가져왔다. 또한 초고령사회 진입, 베이비붐 세대의 노년기 진입 등 변화하는 정책환경에 대응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이와 같은 경제환경의 변화 및 여러 긍정적인 정책 효과를 더욱 극대화하기 위하여 정부는 향후 5년간의 노인일자리 정책 추진방향을 담은 '제3차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 종합계획(2023~2027년)'을 마련하고 2023년 7월 27일에 발표하였다. 종합계획은 '약자복지 지원'과 '좋은 일자리 창출'에 중점을 두고, 초고령사회

와 신노년세대 등의 다양한 일자리 수요에 대응하기 위한 정책 추진 방향을 담고 있다.

2024년 노인일자리 예산과 사업량 확대

먼저 2024년 노인일자리사업 및 예산의 주요 내용으로는, 2023년 88만 3천 개인 노인일자리 수는 2024년에 103만 개 까지 14만 7천 개가 증가하였다. 이에 소요되는 예산도 4,864억 원이 증액되어 일자리 예산이 최초로 2조를 넘길 예정으로 올해 대비 31.6%가 증액되는 것이다. 일자리 유형별로는 공익활동형은 4만 6천 개, 사회서비스형은 6만 6천 개, 민간형은 3만 5천 개가 늘어나, 신노년세대를 대비하는 일자리인 사회서비스형과 민간형 일자리가 증가분 14만 7천 개의 70%인 10만 1천개로 이러한 기조는 계속 유지할 계획이다.

사업량 확대와 함께 활동비 및 인건비 단가가 인상된다. 공익활동형의 경우 참여노인 1인당 활동비가 27만 원에서 29만 원으로, 사회서비스형은 59.4만 원에서

〈표1〉 2024년 노인일자리 사업량 변화

(단위: 개, 백만 원)

| 구분 | 2023년(B) | | 2024년(B) | | 증감(B-A) | |
|-----------|----------|-----------|-----------|-----------|---------|---------|
| | 사업량 | 예산액 | 사업량 | 예산액 | 사업량 | 예산액 |
| 합 계 | 883,000 | 1,540,016 | 1,030,000 | 2,026,370 | 147,000 | 486,354 |
| 공공형(공익활동) | 608,000 | 919,296 | 654,000 | 1,057,910 | 46,000 | 138,614 |
| 민간·사회서비스형 | 275,000 | 506,057 | 376,000 | 833,667 | 101,000 | 327,610 |
| 민간형 | 190,000 | 193,612 | 225,000 | 244,033 | 35,000 | 50,421 |
| 시장형 사업단 | 45,000 | 57,672 | 58,000 | 74,333 | 13,000 | 16,661 |
| 취업알선형 | 88,000 | 4,840 | 95,000 | 5,300 | 7,000 | 460 |
| (지자체) | 20,000 | 1,440 | 25,000 | 1,800 | 5,000 | 360 |
| (민간) | 68,000 | 3,400 | 70,000 | 3,500 | 2,000 | 100 |
| 시니어인턴십 | 55,000 | 122,100 | 70,000 | 155,400 | 15,000 | 33,300 |
| 고령자친화기업 | 2,000 | 9,000 | 2,000 | 9,000 | 0 | 0 |
| 사회서비스형 | 85,000 | 312,445 | 151,000 | 589,634 | 66,000 | 277,189 |
| (사회서비스형) | 80,000 | 304,550 | 141,000 | 572,844 | 61,000 | 268,294 |
| (선도모델) | 5,000 | 7,895 | 10,000 | 16,790 | 5,000 | 8,895 |
| 기타 | | 114,663 | | 134,793 | | 20,130 |

참고: '기타'항목에는 노인일자리 담당자, 한국노인인력개발원, 대한노인회 예산 등이 포함됨.



63.4만 원으로 4.0만 원 인상하여 일자리 참여 어르신의 소득보장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추진할 계획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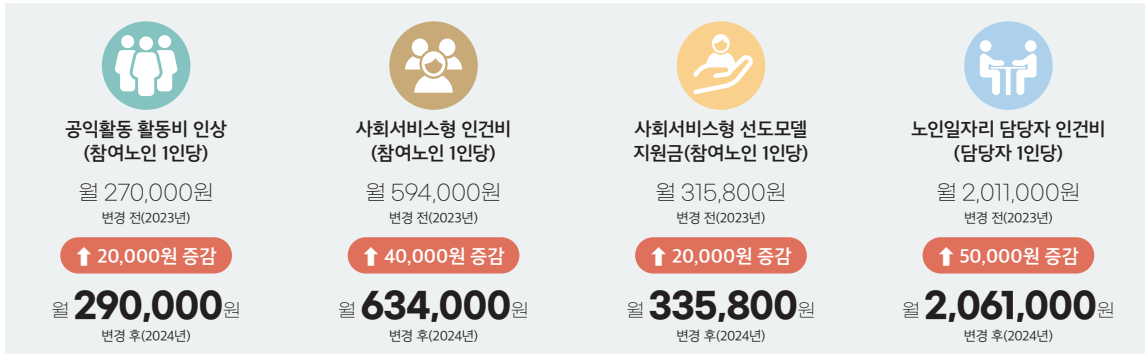
늘어난 일자리는 약자복지를 지원하는 좋은 일자리 확충에 집중될 것으로 보인다. 2024년에 새롭게 추진할 주요 일자리 분야로는 경로당 등 노인여가시설의 지원이다. 경로당은 우리나라의 독특한 노인복지 이용시설로 전국에 68,000개나 있으며 촘촘한 전달체계를 활용하여 노인복지 거점 기관으로 기능할 필요가 있다. 경로당 이용 노인의 상당수는 75세 이상의 고령층으로 이분들을 대상으로 건강관리, 급식 제공 및 치매예방 등 프로그램 운영 인력을 노인일자리 사업 참여자에서 최대한 지원하여 장기요양서비스 등으로의 진입을 최대한 늦출 수 있도록 운영할 계획이다.

공공기관과의 협력사업 확대, 그리고 시장형사업단 경쟁력 강화를 위한 노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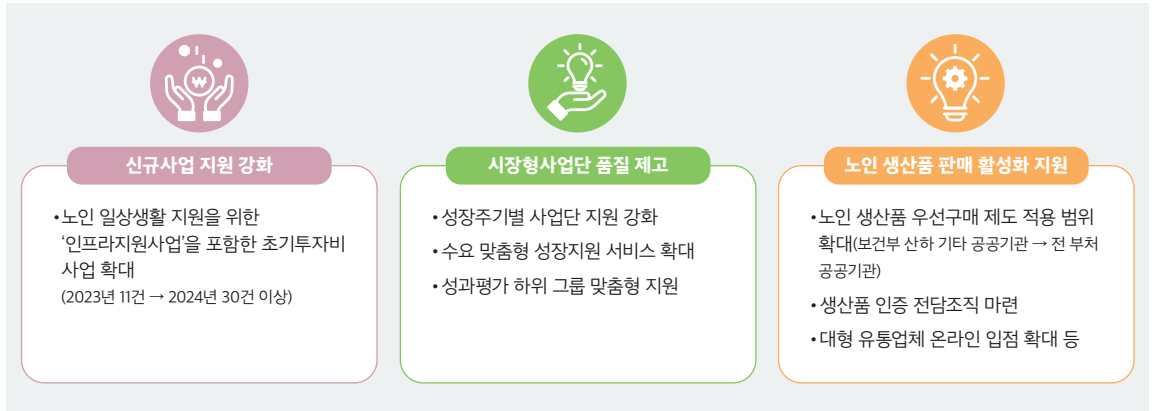
한편, 공공기관과의 협력사업을 신규 창출에도 집중할 계획이다. 타 부처 및 공공기관에서 어르신의 경륜과 역량을 발휘할 수 있는 일자리 창출을 위하여 수요조사를 실시하여 다양한 일자리 아이템을 발굴하였다. 대표적으로 교육부와 함께 초등학교 저학년 학생의 수업 전후 돌봄서비스를 제공하는 “늘봄학교 돌봄지원”, 국토부와 함께하는 소규모 사회복지시설 대상 “시니어 안전점검원” 사업 등이 대표적인 아이템이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좋은 일자리를 공공기관과 협력하여 지속적으로 발굴해 나갈 계획이다.

시장형사업단 경쟁력 강화를 위한 인프라 구축 지원

<표2> 2024년 노인일자리 유형별 단가 개선



〈그림1〉 2024년 시장형사업단 경쟁력 강화를 위한 주요 추진 계획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시장형사업단은 민간형 노인일 자리의 한 유형이지만, 타 민간형 일자리에 비해 급여가 낮고 수익성이 부족한것이 한계로 지적되어 왔다. 특히, 사업비 지원 외 초기투자비 및 임대료 등의 지원이 미흡 하여 시장경쟁력을 갖추기 어려워 수익성 향상에 한계 가 있다는 지적이 계속되어 왔다. 이러한 한계를 극복하 고 경쟁력 있는 시장형사업단을 육성하기 위해 사업단 을 구성할 때 필요한 공간, 사업 용품 등 인프라 구축비 용을 지원할 계획이다. 2023년 시범 사업을 통해 총 5 개소를 선정하였고, 2024년에도 지속적으로 확대하여 추진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시장형사업단의 수익성을 강화하고, 참여 어르신들이 보다 높은 소득을 얻으실 수 있도록 지원하고자 한다.

사회서비스형 다변화에 기여 : 사회서비스형 선도모델 확대

사회서비스형 선도모델 확대로 민간자원의 일자리 투입을 확대할 계획이다. 2022년, 2023년 시범사업으 로 5,000명을 목표로 수행하던 선도모델 사업이 2024 년 10,000명으로 확대 추진하고자 한다. 선도모델은 공 공공기관, 기업 등의 외부자원을 통해 지역사회에 필요한 사회서비스를 지원하는 성과가 있었으며, 사회서비스형 을 다변화하는 데에 기여하였다. 2024년 선도모델 사업 참여가 기업의 ESG성과로 직결될 수 있도록 ESG 성과

지표 개발, 모형 표준화, 전국 보급 등을 추진할 계획을 담고 있다.

폐지수집 노인과 노인일자리 연계 추진

폐지수집 노인을 노인일자리사업 대상으로 흡수하여 운영할 계획도 가지고 있다. 지난해 12월 폐지수집 노인 의 규모와 특성(재산, 소득, 가구구성, 건강상태, 보건복 지서비스에 대한 욕구 등)을 파악한 실태조사 결과와 지 자체 전수조사를 포함하여 노인일자리 및 보건복지서비 스를 연계하는 지원대책을 발표하였다. 지자체 단위의 전수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폐지수집 노인의 소득 보장 및 안전 강화를 위해 노인일자리 연계 등을 추진할 계획 이다.

노인일자리사업의 법적 안정성 강화

2024년 11월 시행 예정인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노인일자리법”) 하위법령을 제 정하여 법적 안정성을 공고히 할 계획이다. 하위법령 제 정을 통해 노인일자리 정의와 유형별 내용을 구체화하 고, 재정적 지원 근거를 마련함과 동시에 노인일자리 를 통해 생산된 물품의 우선구매와 판매 촉진을 강화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는데 집중할 계획이다. 또한, 참여자 와 종사자에 대한 교육, 홍보 지원, 정보시스템 구축 등 사업 운영 기반 강화에 노력하고자 한다.

2024년 고령사회 핵심 아젠다



김수완
강남대학교
사회복지학부 교수



2024년은 우리나라가 본격적으로 천만 노인시대를 맞는 상징적인 해이다. 고령사회 관련된 핵심 정책 아젠다를 가장 쉽게 한눈에 볼 수 있는 것은 대통령 직속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의 추진방향이라 할 수 있다. 여기서는 2023년에 개최된 본회의에서 발표된 고령사회 관련 내용을 중심으로 2024년 고령사회 핵심 아젠다를 짚어보고자 한다.¹⁾

1) 아래에 제시된 내용은 2023년 3월 28일 개최된 제1차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위원장: 대통령)에서 발표된 것을 토대로 정리한 것임.

고령사회의 현황과 진단

초저출산 심화가 이어지면서 인구감소의 변화가 가시화되고 있다. 2021년부터 총인구가 감소하기 시작하였고, 당장 향후 10년 내로 적극생산연령인 25~59세 인구는 320만 명이 감소하는 적극적인 양상으로 나타나게 된다.

그런가하면 베이비붐 세대가 본격적으로 노인 인구로 진입하면서 '고령화'의 속도도 빨라지고 있다. 2024년 올해 65세 이상 인구는 1천만 명을 넘기게 되고, 내년에는 전체 인구의 20%를 차지하여 초고령사회에 진입할 예정이다. 10년 내로 65세 인구는 483만 명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우리나라 평균 기대수명은 81.9세로 OECD 국가 평균수명을 상회하고, 2030년에는 최초로 90세를 넘어 세계 1위로 올라설 것으로 추정된다. 노인인구의 증가는 노후소득보장에 대한 수요와 그에 상응하는 재정확보로 이어질 전망이며, 후기노인인구수 증가에 따른 돌봄 욕구도 급증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처럼 초저출산과 고령화의 중첩적인 영향으로 노년부양비, 즉 생산연령인구 대비 노인인구 비중이 2020년 기준 21.8%에서 2070년에는 100.6%로 네 배 남짓 증가할 전망이다. 이처럼 우리 사회가 초고령사회에 진입하면서 청년세대가 지게 될 미래의 부담이 가중될 것이라는 전망 속에서, 당장 10년 내로 노인부양부담은 2배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기존에 주로 노후 소득보장이나 돌봄 위주로 고령사회 대응정책이 추진되고 다양한 노인 특성이나 연령에 따른 대책이 충분히 반영되지 못한 점을 고려하여, 노인의 건강·연령 등 특성을 고려한 돌봄·의료·고용 등에 혁신적인 변화가 요구된다.

또한 당장 가시화되는 큰 인구변화의 폭과 파급력을 고려해볼 때, 기존의 인구정책은 인구변화로 인한 사회적 영향을 치밀하게 분석하고 적극적으로 대응해왔다고 보기 어렵다. 고령사회 대응은 복지의 문제만이 아니며, 경찰인구 감소, 지역소멸 등의 문제에 대응하기 위한 범부처의 논의가 필요한 사안이다.

특히 고령화 심화를 고려하지 않고 인구 팽창기에 도입된 제도를 지속적으로 운영해오면서 재정건전성과 지속가능성에 대한 점검도 필요한 시점이다. 쓰나미로 비유되는 고령사회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는 그동안 민감성이 높아 다뤄지지 않았던 노동개혁, 연금개혁, 교육개혁 등의 3대 개혁과 함께, 연령기준, 외국인 인력 유입 등이 본격적으로 논의되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고령사회의 정책 목표와 주요 추진 과제

이번 정부가 제시한 고령사회의 정책 목표는 '세대 공존을 위한 지속가능 사회기반 구축'이다. 이에 따른 고령사회의 핵심 아젠다로 꼽고 있는 다섯 가지 혁신과제는 의료·돌봄 연계 혁신, 고령친화적 주거환경 조성, 고용·일자리 지원 강화, 고령친화기술 연계 사회서비스 혁신, 복지시스템 지속가능성 제고 등이다.

1) 의료·돌봄 연계 혁신

첫 번째 핵심 아젠다는 의료·돌봄 연계 혁신으로, 초고령사회에 대비하여 살던 곳에서 계속 거주하는 삶(Ageing in Place)을 보장하는 통합적인 돌봄체계 혁신을 추진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구체적으로 추진하는 정책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재가돌봄서비스를 확충하고 지역의 의료·돌봄 자원 연계망을 구축하여 향후 확산 가능한 노인 의료·돌봄 연계모형을 정립하는 것이다. 이러한 차원에서 2023년 7월부터 12개 시군구를 대상으로 '노인 의료·돌봄 통합지원 시범사업'이 이뤄지고 있다.

둘째, 지역사회 계속 거주를 위한 다양한 건강관리·의료 서비스를 제공하고 확산을 추진하는 차원에서 지역 사회 사전예방적 건강관리를 강화한다. 분절적인 의료 이용을 '사람 중심'으로 통합 관리하고, 건강상태를 포괄적으로 진단·관리할 수 있도록 일차의료기관 기반으로 고혈압, 당뇨 등의 만성질환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는 것이다.

셋째, 의료·돌봄 공급 확대와 지역격차를 해소하기



위해, 노인 의료·돌봄 인력과 인프라 확충 및 지역별 격차 완화를 위한 방안 마련을 추진한다.

2) 고령친화적 주거환경 조성

고령자 복지주택 확대와 고도화, 고령친화마을 조성 등의 맞춤형 주거지 공급, 돌봄 서비스 연계 강화 등으로 고령자의 주거 수요에 대응하는 것이다.

구체적으로는 다음과 같은 정책들이 추진된다. 첫째, 특화주택 확대이다. 고령자 특성에 맞춰 무장애 설계(Barrier free)와 돌봄서비스가 결합된 고령자 복지주택 공급을 확대하는 것이다. 2018년에서 2022년 2천 호였던 것에서 2023년에서 2027년에는 5천 호 이상으로 공급물량을 크게 확대할 예정이다. 또한 국토부와 복지부의 협업을 통해 생활·돌봄서비스 뿐만 아니라 보건·의료서비스까지 제공할 수 있도록 고령자복지주택의 고도

화를 추진한다. 영구임대 단지에는 고령층에 대한 돌봄이 가능하도록 주거복지사를 대폭 확대하여, 2022년에 15개소에 배치되었던 것에서 2023년에는 148개소로 확대하도록 했다.

셋째, 고령친화 마을 조성이다. 수도권 은퇴자, 고령자 등이 지방으로 이주하여 정착하는 것을 지원하기 위해 지역활력타운 조성을 추진한다. 또한 세대별 맞춤형으로 주거·돌봄·일자리 등을 통합 지원하는 다부처 지역 활력타운 사업을 지속적으로 확대하는 방안을 마련한다.

3) 고용·일자리 지원 강화

고령사회에 대응한 세 번째의 혁신 아젠다는 고용과 일자리 지원 강화이다. 노동개혁과 관련된 아젠다로서, 직무와 성과 중심의 임금체계 개편과 연계하여 계속 고용을 위한 사회적 논의에 착수하는 것, 그리고 중장년

친화 일자리 사업을 확대하는 내용이다.

첫째, 계속 고용 제도 논의에 착수하여, 직무·성과 중심의 임금체계 개편과 연계하여 재고용·정년 연장 등 계속 고용 제도와 관련된 사회적 논의를 추진한다. 먼저 경제사회노동위원회 연구회, 미래노동시장 연구회 논의를 토대로 사회적 논의를 착수하고, 논의 결과에 기반한 계속고용 로드맵 마련을 추진하도록 한다.

둘째, 자율적 계속 고용 지원을 확대한다. 임금체계 개편 컨설팅 제공, 계속고용장려금 확대 등 노사 협의를 통한 자율적 계속 고용 제도를 확산하도록 지원하는 것이다.

셋째, 노인일자리 고도화이다. 증가하는 노인 수를 고려할 때 노년기 소득과 사회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노인 일자리는 지속적으로 확대해나가되, 신노년층에 맞는 새로운 일자리를 확충하는 것이 2024년에도 중요한 정책 과제로 제시될 수 있다. 특히 사회 공헌 욕구가 크고 직무 전문성을 갖춘 베이비붐 세대의 수요를 고려하여 사회서비스형·민간형 일자리 비중을 확대해나가게 된다. 지난 7월에는 베이비붐 세대의 노년기 진입 등 환경 변화에 맞는 향후 5년간의 노인일자리 정책 추진 방향을 담은 「제3차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 종합계획(2023~2027)」이 발표된 바 있어, 자세한 내용을 참고할 수 있다.

4) 고령친화기술 연계 사회서비스 혁신

고령친화기술을 활용하여 사각지대 없는 돌봄 서비스를 제공하고, 고령친화산업 생태계를 조성하고 확산을 추진한다. 구체적으로는 첫째, 기술을 활용하여 지역별로 불충분하거나 불균등한 돌봄과 의료 자원의 한계를 보완하고 사각지대 없는 돌봄을 제공한다. 이를 위해 일상생활 지원 돌봄로봇 개발과 수요자 중심의 서비스 실증 연구를 추진한다. 둘째, AI·IoT, 돌봄로봇, 보조기기 등 고령친화 산업 생태계를 조성하고 확산하기 위해 혁

신적 기술을 도입하고 분야별 연계 방안을 마련한다.²⁾

이와 관련한 구체적인 내용은 2023년 말에 발표된 제3차 사회보장기본계획과 제1차 사회서비스기본계획에서 참고할 수 있다.

5) 복지시스템 지속가능성 제고

인구 팽창기에 도입된 복지시스템을 점검하고 개혁을 통해 지속가능한 사회보장시스템을 구현하기 위해 사회보장제도 개혁과 연령기준 조정과 같은 정책 아젠다를 추진하게 된다.

첫째, 명확한 근거와 데이터를 기반으로 한 사회적 합의에 기반하여 사회보장제도 개혁을 추진한다. 여기에는 올해 추진 중인 연금개혁 공론화 작업도 포함될 수 있을 것이다.

둘째, 노인의 건강과 소득 수준의 변화와 사회참여 욕구 등을 고려하여 사회보장제도 전반의 연령 기준 재검을 위한 사회적 논의를 착수한다.

맺는 말

위에 제시된 고령사회 대응 아젠다가 본회의에서 발표되고 나서 후속조치로써 출산고령사회위원회와 보건복지부가 공동으로 「백세사회정책기획단」을 출범한 바 있다. 백세사회정책기획단은 심화되는 고령화에 체계적으로 대비하기 위해 구성된 회의체로서, 각 분야별 핵심 정책과제를 발굴하고 구체화하는 활동을 수행한다. 총괄반을 포함하여 일자리와 소득, 의료·돌봄·요양, 주거·시설, 기술·산업, 축소사회대응의 5개 영역이 논의되고 있다.

무엇을 아젠다로 삼을 것인가도 중요하지만, 설정된 아젠다를 어떻게 구체화하고 실현할 것인가가 더 중요할 수 있다. 아젠다의 설정이 선언에 그치지 않고, 2024년에는 선언된 방향에 따라 구체적인 정책 실행으로 제대로 실천되기를 기대한다.

2) 다만 2024년 전반적인 R&D 예산 축소 기조로 인해, 고령친화기술 R&D를 활성화하려는 계획에도 다소 차질이 발생할 것으로 보인다.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사업 실태조사로 본 참여노인 특성 변화



김문정

한국노인인력개발원
연구조사부 부연구위원



STATISTICS REVIEW

들어가며

2004년 처음 시작된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사업(이하, 노인일자리사업)은 그동안 정책환경변화에 대응하여 변화를 거듭해왔다. 2004년 3만여 개로 시작된 사업량은 2023년 90만 개를 넘어섰고, 당초 공익활동과 시장형사업단, 취업알선형의 3개 유형으로 시작되었으나 시니어인턴십, 고령자친화기업 등의 취창업형 일자리를 확장하고 최근에는 사회서비스형, 사회서비스형 선도모델 등의 지역사회 공익 증진에 기여할 수 있는 일자리 유형이 추가되었다. 급속한 인구고령화의 진행과 길어진 노년기 노후소득보장에 대한 사회적 욕구 증가, 그리고 노인세대 내 특성 다양화에 대응하기 위한 정책적 변화로 볼 수 있다.

최근 10년 노인일자리를 둘러싼 가장 큰 정책환경변화는 베이비붐 세대(1955~1963년생)의 노동시장 은퇴와 노인세대 진입에 따른 노인세대의 특성 다변화로 볼 수 있다. 국민연금 등 공적노후소득보장체계가 미흡한 상황에서 인구 거대 집단인 베이비붐 세대가 은퇴를 시작하고, 이들이 노년기로 진입함에 따라 노후소득보장에 대한 사회정책적 중요성이 더욱 강조되고 있으며 기존 노인세대와는 다른 특성을 가진 노인세대의 욕구와 특성에 주목하면서 정책 변화를 거듭해왔다. 향후 저출생과 맞물려 인구고령화 현상이 심화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고, 단기간에 공적노후소득보장체계의 안정화를 기대하기 어렵다는 점에서 노인일자리사업의 확충은 앞으로도 몇 년간은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 다만, 국가 재정이 투입되는 일자리사업으로 보다 효율적이고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노력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이에 본고에서는 그간 노인일자리사업 참여자의 특성 변화와 일에 대한 인식 변화, 그리고 경제활동상태 변화를 종합적으로 살펴보고 참여자에게 보다 긍정적으로 작용하기 위한 정책적 시사점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노인일자리 실태조사 개요 및 추진 현황

본고에서 노인일자리사업 참여노인의 특성변화를 살

〈표1〉 노인일자리사업 실태조사(참여자가조사) 개요 (2007~2022년)

| | 2007 | 2010 | 2013 | 2016 | 2019 | 2022 |
|------------|--------------------------------|---------------------------|---------------------------|------------------------|-----------------------------|--|
| 조사명 | 노인실태조사 | 노인실태조사 | 노인실태조사 |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사업 실태조사 |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사업 실태조사 |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사업 실태조사 |
| 조사대상 | 노인일자리 참여자 | 노인일자리 참여자 | 노인일자리 참여자 및 대기자 | 노인일자리 참여자 | 노인일자리 참여자 | 노인일자리 참여자 및 대기자 |
| 사업유형 | 공익형, 교육형, 복지형, 시장형, 인력파견형, 통합형 | 공익형, 교육형, 복지형, 시장형, 인력파견형 | 공익형, 교육형, 복지형, 시장형, 인력파견형 | 공익활동, 시장형사업단, 인력파견형 | 공익활동, 사회서비스형, 시장형사업단, 인력파견형 | 공익활동, 사회서비스형, 시장형사업단, 취업알선형, 고령자친화기업, 시니어인턴십 |
| 모집단수 (명) | 121,762 | 242,318 | 234,867 | 320,521 | 535,427 | (참여자) 872,613 (대기자) 137,689 |
| 조사 표본수 (명) | 2,987 | 1,500 | (참여자) 2,000 (대기자) 500 | 2,500 | 3,086 | (참여자) 3,078 (대기자) 518 |
| 조사시기 | 2007.06~08. | 2010.08.~10. | 2013.06.~ 08 | 2016.06.~08. | 2019.10.~11. | 2022.10.~12. |
| 통계승인 | - | - | - | - | - | 제464001호 |

주: 각 연도별 '노인실태조사' 및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사업 실태조사' 보고서에 기초하여 정리하였음.

펴보기 위해 한국노인인력개발원에서 조사한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사업 실태조사' 결과를 활용하였다.

노인일자리사업 실태조사는 참여노인을 대상으로 참여 실태 및 인식을 조사하기 위해 2007년부터 3년 주기로 실시되었다. 동 실태조사는 노인일자리 참여자의 생활 현황과 변화 추이를 가장 정확하게 파악할 수 있는 유일한 자료이며, 동일한 대상자에게 조사되는 패널 데이터는 아니지만 횡단데이터의 성격으로 노인일자리 참여노인의 시계열적인 정보가 담보되는 분석 항목을 담고 있어 거시적인 관점에서 참여자의 특성이 어떻게 변화하였는지 볼 수 있다는 강점이 있다.

여기서는 노인일자리사업 실태조사가 체계성을 가지고 본격적으로 수행된 시점인 2016년 조사결과와 2019년, 2022년 조사결과를 활용하여 참여노인의 특성변화를 종합적으로 살펴보았다.

2019년에는 신규 도입된 '사회서비스형' 참여자를 포함하고 있어 신규 사업 도입 전과 후의 참여자 특성 변화 추이를 검토해볼 수 있다.

참여노인의 특성변화에 대한 전반적인 기술분석으로는 성별, 연령, 교육수준, 가구형태 등 인구사회학적 특성을 중심으로 살펴보았고, 참여노인의 경제적 특성 변화로 노후준비현황과 가구소득 변화를 검토하였다. 이어, 일에 대한 욕구와 인식에 대한 전반적인 변화 정도를 검토하였다.

노인일자리 참여자의 일반적 특성 변화

노인일자리 참여자의 일반적 특성을 살펴본 결과, 참여노인의 40% 정도가 시(대도시)에 거주하고 있으며, 여성 비중이 높다는 시계열적 특성이 유지되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연령별 구성비는 60~64세 고령층

〈표2〉 노인일자리 참여자 일반적 특성 변화(2016, 2019, 2022)

(단위: 명, %)

| 구분 | | 2016 | 2019 | 2022 |
|------|----------------------|------------------|------------------|------------------|
| 전체 | | 2,500 (100.0) | 3,086 (100.0) | 3,078 (100.0) |
| 사업유형 | 공익활동 | 79.0 | 85.0 | 76.8 |
| | 사회서비스형 | - | 3.5 | 8.1 |
| | 시장형사업단 | 19.0 | 9.7 | 4.5 |
| | 취업알선형(구, 인력파견형) | 1.4 | 1.8 | 6.1 |
| | 민간형(시니어인턴십, 고령자친화기업) | - | - | 4.5 |
| 지역 | 시 | 38.9 | 38.9 | 42.0 |
| | 군 | 20.0 | 22.2 | 19.0 |
| | 구 | 41.1 | 39.0 | 39.0 |
| 성별 | 남성 | 31.3 | 41.2 | 38.2 |
| | 여성 | 68.7 | 58.8 | 61.8 |
| 연령별 | 60~64세 | 1.4 | 1.9 | 4.1 |
| | 65~69세 | 15.1 | 12.9 | 12.3 |
| | 70~74세 | 35.3 | 29.8 | 22.8 |
| | 75~79세 | 32.9 | 33.3 | 32.2 |
| | 80세 이상 | 15.2 | 22.2 | 28.5 |
| 교육수준 | 무학 | 15.1 | 6.7 | 15.4 |
| | 초졸 | 49.2 | 35.6 | 36.2 |
| | 중졸 | 18.2 | 27.1 | 20.5 |
| | 고졸 | 13.5 | 23.2 | 22.3 |
| | 초대졸이상 | 3.7 | 7.4 | 5.7 |
| 가구형태 | 노인독거 | 39.2 | 32.9 | 31.3 |
| | 노인부부 | 36.2 | 51.5 | 51.1 |
| | 자녀동거 | 23.5 | 15.6 | 15.0 |
| | 기타 | 1.1 | 0.1 | 2.6 |

참고: 각 연도 가중치를 부여함.

비중이 증가한 한편, 70~74세 비중이 다소 감소한 것으로 나타난다. 60~64세 고령층 비중 증가와 관련해서는 2022년부터 60~64세 참여율이 높은 시니어인턴십, 고령자친화기업 참여자가 새롭게 조사대상에 포함되었기 때문으로 이해할 수 있다.

교육수준에 있어서는 초졸 비중이 40% 수준에서 30% 수준으로 감소하였고, 고졸이상(고졸+초대졸 이상) 학력자 비중이 점차 증가하고 있는 경향을 보인다. 이는 베이비붐 세대를 포함한 신노년세대의 특성이 반영된 것으로 볼 수 있다. 세대구성에 있어서는 '자녀동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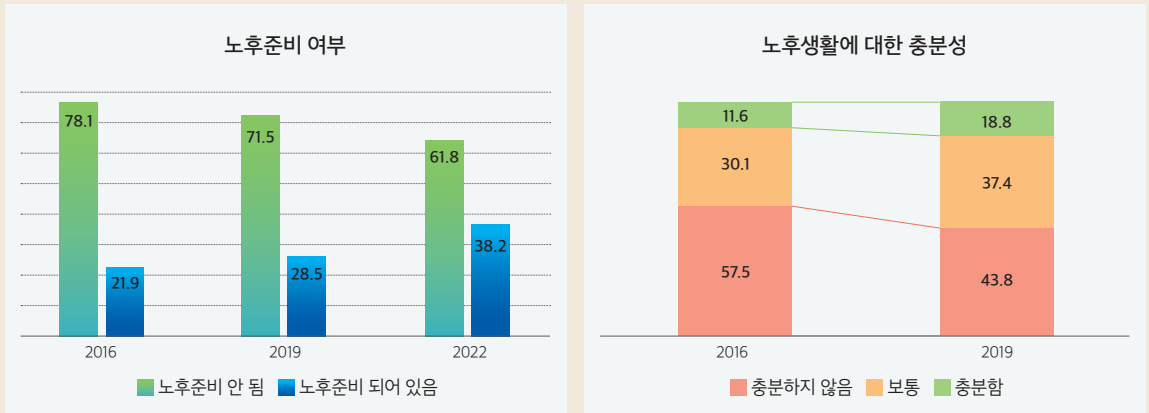
비중은 감소하는 반면, '노인부부' 구성비중이 증가하는 경향을 보인다.

노인일자리 참여자의 노후준비 현황 및 경제활동 상태

노인일자리 참여자의 노후준비 현황과 노후생활에 대한 충족수준을 살펴보았다. 시계열적으로 여전히 노후준비가 되지 않은 비중이 높게 나타나지만, 노후준비가 전혀 되지 않은 노인의 비중이 점차 감소하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또한, 노후준비가 충분하다고 생각하는 주관적인 인식을 조사한 결과를 살펴보면, 충분하

〈그림1〉 노인일자리 참여자의 노후준비 현황 및 충분도

(단위: %)



참고: 1) 가중치를 부여함.

2) 2022년 조사에는 노후생활 충분성에 해당하는 동일항목의 조사가 이루어지지 않아 제시하지 않음.

다고 인식하는 비중은 20% 미만으로 나타나 대부분은 노후생활에 경제적 불안감을 갖고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노후준비가 되어 있다고 응답한 참여자에 한하여 어떻게 노후준비를 하였는지 살펴본 결과, 국민연금을 포함한 공적연금으로 노후준비를 하는 비중이 크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난다. 한편, 예금 등 저축성 보험에 있어서는 2016년 61.1%에서 2019년 56.7%, 2022년에는 28.5%까지 큰 폭으로 감소한 것으로 나타난다.

참여자의 특성별로 노후준비여부를 살펴본 결과, 연령이 높아질수록 노후준비를 하지 못한 비중이 증가하고, 학력이 높아질수록 노후준비가 되어 있는 비중이 증가하는 특성이 유지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성별로 살펴보면, 남성의 경우 '노후준비가 되어 있다'고 응답한 비중이 크게 증가한 반면 여성의 경우는 남성에 비해 증가

폭이 크지 않으며 노후준비에 대한 성별 격차가 심화된 것으로 나타난다.

사업유형별로 공익활동 참여자 대비 취업알선형, 시장형사업단, 민간형 노인일자리 참여자의 경우 노후준비가 되어 있다는 비중이 높게 나타났다. 가구특성에 따라서는 독거노인이 가장 노후준비가 되어 있지 않고, 노인부부와 자녀와 동거하는 가구의 경우 노후준비가 되어 있는 비중이 높은 특징이 계속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노인일자리 참여자의 경제적 수준을 나타내는 월 평균 가구소득을 살펴보면, 2016년 대비 2019년 참여자의 가구소득이 약 7만 원 증가한 것으로 나타난다. 소득항목별로는 사업 및 근로소득이 가장 높고, 공적연금, 사적이전소득 순으로 높은 시계열적 특성이 유지되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연령대별로는 60~64세 고령

〈표3〉 노후준비 항목

(단위: 명, %)

| 전체 | | 2016 | 2019 | 2022 |
|--------|------------|------|------|------|
| 노후준비항목 | 공적연금 | 24.2 | 32.9 | 61.2 |
| | 사적연금 | 7.4 | 4.2 | 9.5 |
| | 예금, 저축성 보험 | 61.1 | 56.7 | 28.5 |
| | 주식 등 | 1.1 | 0.4 | 0.4 |
| | 기타 | 6.3 | 6.6 | 0.4 |

참고: 1) 각 연도별 가중치를 부여함.

〈표4〉 참여자 특성별 노후준비 현황

(단위: %)

| '노후준비가 되어있음' 응답자 전체 | | 2016 | 2019 | 2022 |
|---------------------|----------------------|------|------|------|
| | | 21.9 | 28.5 | 38.2 |
| 사업유형 | 공익활동 | 23.3 | 27.3 | 32.3 |
| | 사회서비스형 | - | 28.2 | 50.8 |
| | 시장형사업단 | 28.4 | 38.3 | 58.9 |
| | 취업알선형(구, 인력파견형) | 39.6 | 31.5 | 60.5 |
| | 민간형(시니어인턴십, 고령자친화기업) | - | - | 63.9 |
| 지역 | 시 | 22.8 | 23.4 | 41.0 |
| | 군 | 16.1 | 35.9 | 36.6 |
| | 구 | 22.5 | 29.3 | 35.9 |
| 성별 | 남성 | 23.4 | 35.6 | 51.5 |
| | 여성 | 20.4 | 23.4 | 32.2 |
| 연령별 | 60~64세 | 37.1 | 44.0 | 68.5 |
| | 65~69세 | 27.4 | 29.0 | 51.3 |
| | 70~74세 | 22.3 | 30.6 | 41.5 |
| | 75~79세 | 18.4 | 27.4 | 29.7 |
| | 80세 이상 | 17.7 | 25.5 | 27.1 |
| 교육수준 | 무학 | 16.7 | 20.2 | 19.3 |
| | 초졸 | 18.7 | 24.0 | 30.6 |
| | 중졸 | 22.2 | 30.1 | 38.1 |
| | 고졸 | 31.2 | 32.8 | 56.2 |
| | 초대졸이상 | 39.7 | 35.9 | 63.9 |
| 가구형태 | 노인독거 | 17.9 | 23.2 | 29.0 |
| | 노인부부 | 24.0 | 33.1 | 47.5 |
| | 자녀동거 | 22.7 | 24.3 | 49.5 |
| | 기타 | 25.1 | 22.2 | 35.2 |

참고: 1) 각 연도별 가중치를 부여함.

2) 노후생활비 마련 여부에 대해 '그렇다'라고 응답한 비율을 의미함.

세대의 월평균 가구소득이 가장 높고, 80세 이상 후기 노인세대의 가구소득이 가장 낮은 특징이 유지되고 있으나, 2016년 대비 2019년 연령대별 소득격차가 다소 심화된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일에 대한 욕구 및 인식 변화

향후 일하기를 희망하는 비중은 90% 이상으로 참여자가 향후에도 어떤 형태로든 일을 지속하길 희망하는

것으로 나타난다. 특히, 노인일자리에 계속 참여하고자 희망하는 참여자 비중이 2016년 94.3%에서 2019년 96.1%, 2022년 96.5%로 지속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다.

향후 일자리 선택 시 가장 우선시 하는 조건은 '급여 수준'과 '근로시간 및 근로일수로 유지되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그림3 참조) 특히, 다른 기준에 비해 급여 수준에 대한 욕구가 상대적으로 크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난다. 또한 희망 근로 형태로는 전일제보다는 시간제

〈표5〉 노인일자리 참여에 따른 월평균 가구 소득

(단위: 만 원)

| 구분 | | 2016 | 2019 |
|--------------------|------------|-------|-------|
| 전체 평균소득(월평균)(가구소득) | | 107.4 | 114.9 |
| 소득항목별 | 사업 및 근로소득 | 65.0 | 65.2 |
| | 금융 및 부동산소득 | 2.5 | 2.0 |
| | 민간보험 | - | 0.6 |
| | 사적이전소득 | 13.7 | 8.4 |
| | 공적이전소득 | 26.0 | 26.1 |
| | 기타 수입 | 0.1 | 0.3 |
| 성별 | 남성 | 107.0 | 112.4 |
| | 여성 | 107.6 | 116.6 |
| 연령 | 60-64세 | 161.5 | 192.5 |
| | 65-69세 | 115.5 | 124.4 |
| | 70-74세 | 110.5 | 122.0 |
| | 75-79세 | 100.4 | 112.9 |
| | 80세 이상 | 101.8 | 96.1 |
| 사업유형별 | 공익활동 | 108.9 | 109.6 |
| | 시장형사업단 | 120.2 | 142.3 |
| | 취업알선형 | 190.5 | 196.2 |
| | 사회서비스형 | - | 125.4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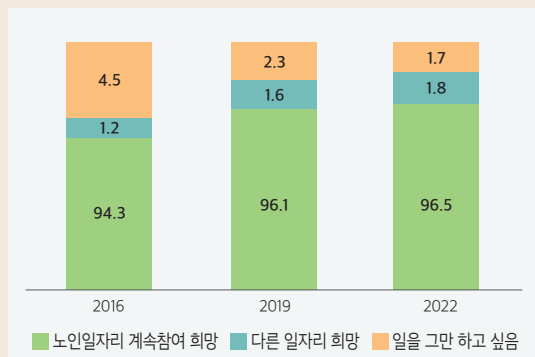
참고: 1) 각 연도별 가중치를 부여함.

2) 조사대상자의 주관적 인지에 의한 조사결과임으로 해석에 주의할 필요가 있음.

3) 2022년 실태조사에서는 참여자의 소득재산정보를 한국사회보장정보원 행정데이터와 연계하여 조사함에 따라 과거 조사 결과와 비교가 어려움으로 2016, 2019년 조사결과만 제시함.

일자리를 선호하는 비중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난다. 희망하는 월평균 임금도 약 20만 원 정도 증가한 것으로 나타난다.(그림4 참조)

〈그림2〉 향후 근로 희망 비중 변화 (단위: %)



참고: 1) 각 연도별 가중치를 부여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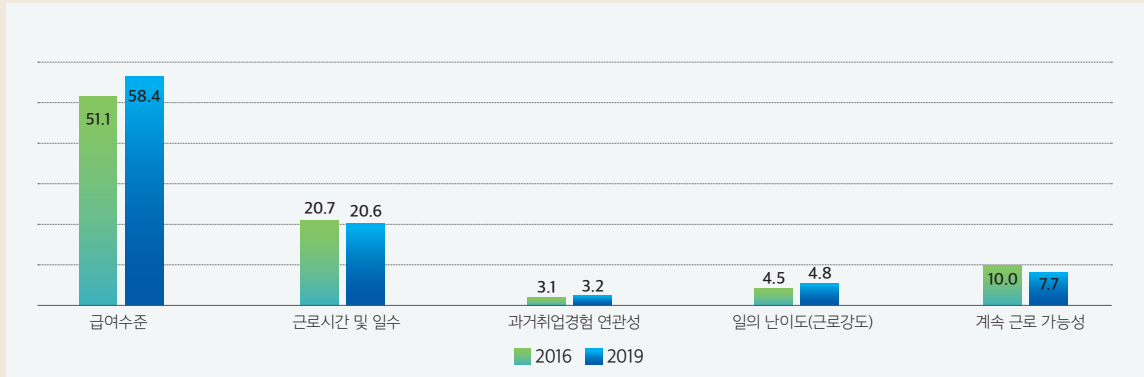
참여자 특성에 따라 향후 일을 계속하고자 하는 욕구를 살펴보면, 80세 이상 후기 노인의 경우 향후에도 계속 일을 하고자 하는 희망자 비중이 꾸준히 증가 추세를 보인 것을 확인할 수 있다. 또한, 성별로 여성은 계속 일하고자 하는 욕구가 꾸준히 증가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사업유형별로는 사회서비스형 참여자의 경우 99%가 향후에도 일하기를 희망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표6 참조)

나가며

본 고에서는 노인일자리 참여자의 특성과 경제상태, 일에 대한 욕구를 중심으로 시계열적 변화 추이를 검토하였다. 분석 결과, 참여노인의 40% 정도가 시(대도시)에 거주하고 있으며, 여성 비중이 높다는 시계열적 특성

〈그림3〉 향후 일자리 선택 시 우선이 되는 조건

(단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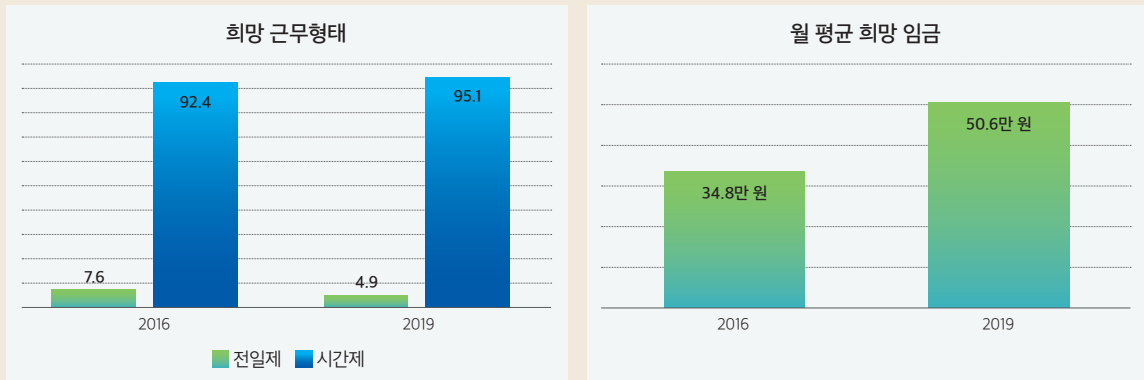


참고: 1) 각 연도별 가중치를 부여함.

2) 2022년 조사에는 향후 일자리 선택시 우선이 되는 조건을 묻는 동일문항의 조사가 이루어지지 않아 제시하지 않음.

〈그림4〉 향후 희망하는 근로조건

(단위: %, 만 원)



참고: 1) 각 연도별 가중치를 부여함.

2) 2022년 조사에는 향후 희망근로조건을 묻는 동일문항의 조사가 이루어지지 않아 제시하지 않음.

이 유지되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연령대별로 60세 초반의 고령층 비중이 증가하고 있기는 하나, 70대(70~79세) 노인의 참여율이 압도적으로 높은 특성도 유지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한편, 과거에 비해 참여자의 학력수준이 점차 높아지고 있으며 (고졸 이상(고졸+초대졸 이상) 학력자 비중이 점차 증가), 부족하지만 노후대비를 하고 있는 비중이 크게 증가하였고, 향후 노인일자리를 포함하여 계속 일하기를 희망하는 비중 역시 꾸준히 증가하는 경향성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는 베이비붐 세대를 포함한 신노년세

대의 특성이 반영된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노후준비 여부와 관계없이 불안정한 노후에 대한 우려를 가지고 있는 참여자의 비중이 높게 나타나는데, 이는 향후 일을 선택하는 기준에 있어서 '급여수준'을 가장 우선시 생각하는 비중이 높다는 조사결과와도 관련이 있을 것으로 파악된다. 여전히 생계비 마련 등의 경제적인 사유로 향후에도 일하기를 희망하는 비중이 많다는 것을 시사한다. 한편 희망 근로 형태에 있어서는 '전일제' 근무보다는 시간활용이 탄력적인 '시간제'를 희망하는 참여자 비중이 점차 높아지는 특성도 확인할 수 있었다.

〈표6〉 참여자 특성별 향후 근로 욕구

(단위: %)

| ‘향후 일을 계속하고 싶음(노인일자리+그외 일자리)’ 응답자 전체 | | 2016 | 2019 | 2022 |
|---|----------------------|-------|------|------|
| | | | 95.5 | 97.7 |
| 사업유형 | 공익활동 | 96.6 | 98.7 | 98.2 |
| | 사회서비스형 | - | 99.3 | 99.1 |
| | 시장형사업단 | 97.1 | 96.8 | 97.1 |
| | 취업알선형(구, 인력파견형) | 97.5 | 95.5 | 97.8 |
| | 민간형(시니어인턴십, 고령자친화기업) | - | - | 98.9 |
| 지역 | 시 | 96.7 | 98.0 | 98.5 |
| | 군 | 86.9 | 98.8 | 97.0 |
| | 구 | 98.8 | 98.8 | 98.6 |
| 성별 | 남성 | 94.2 | 98.7 | 97.5 |
| | 여성 | 96.2 | 98.3 | 98.5 |
| 연령별 | 60~64세 | 100.0 | 98.0 | 98.6 |
| | 65~69세 | 98.3 | 99.0 | 98.7 |
| | 70~74세 | 95.5 | 98.3 | 98.0 |
| | 75~79세 | 95.7 | 98.8 | 98.5 |
| | 80세 이상 | 92.1 | 97.9 | 97.7 |
| 교육수준 | 무학 | 92.9 | 98.7 | 98.8 |
| | 초졸 | 95.2 | 98.9 | 97.8 |
| | 중졸 | 97.3 | 98.7 | 98.4 |
| | 고졸 | 98.5 | 97.5 | 98.1 |
| | 초대졸이상 | 92.8 | 97.6 | 95.9 |
| 가구형태 | 노인독거 | 96.0 | 98.9 | 98.9 |
| | 노인부부 | 96.5 | 98.3 | 98.8 |
| | 자녀동거 | 92.8 | 98.1 | 98.1 |

참고: 노후생활비 마련 여부에 대해 ‘그렇다’라고 응답한 비율을 의미함.

이는 건강관리 및 개인생활과 일을 병행할 수 있는 시간제 일자리에 대한 욕구가 증가하고 있음을 나타낸다. 이러한 노인세대의 욕구를 반영하여 향후 근로기간은 안정적이지만 근로시간은 유연한 형태의 시간제 일자리 확대가 필요함을 시사한다.

본고에서 살펴본 시계열적 변화만으로는 참여자의 특성변화 및 욕구 변화를 모두 설명할 수는 없지만, 노인일자리 참여자의 특성이 다양한 측면에서 변화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는 기회로 의의가 있다. 향후 보다 면밀한 분석을 통해 노인일자리 참여자의 특성변화, 참여

에 따른 변화를 종합적으로 살펴봄으로써 노인일자리사업의 효과성 및 실효성 제고를 위해 노력해야 할 것이다.

참고문헌

- 1) 윤기연, 정새날, 홍정아(2016). 2016년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사업 실태조사. 한국노인인력개발원.
- 2) 박경하, 김문정, 김수린, 배재윤(2019). 2019년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사업 실태조사. 한국노인인력개발원.
- 3) 천재영, 배재윤, 남기철, 손창균, 윤강재, 김란주, 원시연, 이주원, 최지영, 강현민, 천화진, 윤열(2022). 2022년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사업 실태조사. 한국노인인력개발원.



스마트폰 좀 쓰다면? 보행로 정보 수집 전문가!

인터뷰 은평시니어클럽 송가영 선임,
사회서비스형 노인일자리사업 참여자 윤용기 어르신
글 한국노인인력개발원 홍보기획부 원신원 차장

보행로 정보수집 전문가사업(사회서비스형) 보행로 정보수집 교육을 이수한 시니어 인력(60세 이상)이 건물, 장애물 정보 등을 수집하여 보행로 공공데이터 정보 구축에 기여, 보행약자의 이동권 향상 지원

다가오는 2025년, 이르면 올해 말 우리나라 인구 다섯 명 중 1명이 65세 이상인 초고령사회로 진입한다. 세계 역사상 가장 빠른 속도로 고령국가가 되어, 바야흐로 노인인구 천만시대이다.

더욱이 올해는 노인일자리사업이 시행된지 20주년이 되는 해로서 기존에 많이 시행되고 있는 노인일자리(지역사회 환경개선, 노노케어)뿐만 아니라 고령인구의 다양한 경험 및 욕구에 맞춘 노인일자리 변화도 지속적으로 요구되고 있다.

이중 스마트폰을 활용해 보행약자의 이동권 향상 등 정밀 보행지도 구축을 지원하는 노인일자리사업(사회서비스형)이 있다. 본 사업은 2021년도에 한국노인인력개발원이 노인일자리 아이디어 공모를 추진하여 기업에서 제안·발굴해낸 아이템으로, 이 아이템을 눈여겨본 서울 지역본부에서 서울(강서, 성북, 은평, 중랑) 및 제주 지역에 시범사업으로 추진하였다. 총 56명이 참여하였고 당해 약 12만 9천 건의 정보를 수집하는 성과를 올렸다.

지난 시범사업 이후 보행로 정보 수집 전문가 사업은 현재 7개 시도 500여 명의 참여자가 활동하고 있는 사업으로, 앞으로도 전국적 확대 수요가 있는 지속가능한 사업이라 할 수 있다.

올해도 이 사업을 추진하는 송가영 은평시니어클럽

담당자와 윤용기 참여자를 노인일자리 수행기관인 강서 50+센터에서 취재차 만났다. 가독성을 높이기 위해 수행 기관과 참여자 간 인터뷰 방식으로 지면에 담아보았다.

Q. 다양한 노인일자리 중 이 사업단을 시작하게 된 계기가 궁금합니다.

송가영 23년도 한국노인인력개발원 서울지역본부에서 시범사업을 제안하였고, 저희 기관에서도 거리나 건물의 출입구 형태, 계단 높낮이 등 보행지도 구축을 하면 시각장애인이나 휠체어 이용자들에게 도움이 많이 될 것으로 판단하여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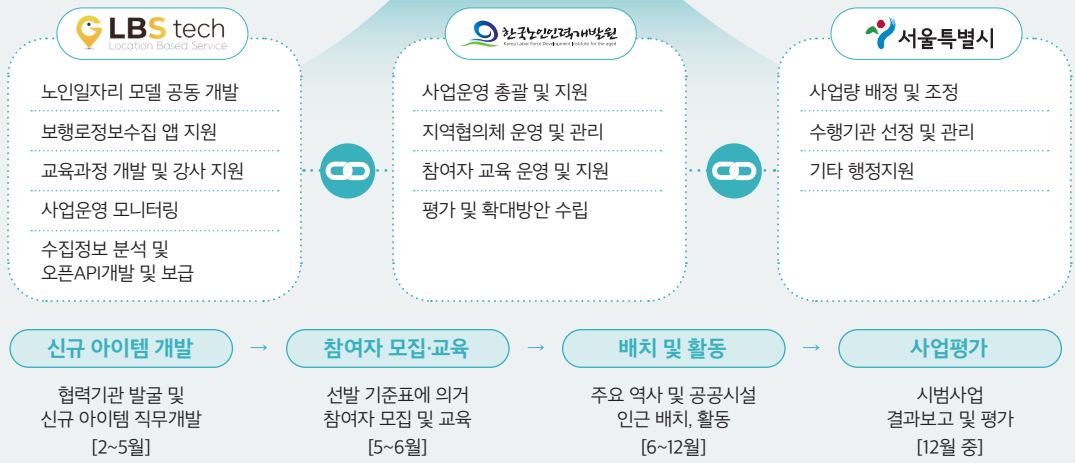
또 물론 요즘은 스마트폰을 잘 쓰시는 어르신들도 많아 지기도 했어요.

Q. 아직 이러한 사업을 모르지만 향후 사업 추진할 수행 기관들에게 운영 노하우를 소개해 주세요.

송가영 저희 기관은 총 10분이 2인 1조를 이루어 사시는 지역 인근 지하철역을 활동범위로 정해 참여 중이신데요. 혹시 모를 안전사고 등을 위해 가급적 2인 1조로 활동하게끔 조를 짰습니다. 참여자 선발은 노인일자리 지침에 맞춰 선발을 하되, 사업특성을 고려하여 스마트폰 앱 활용이 가능하신 분들로 선발하여야 합니다.

보행로 정보 수집 전문가 시범사업

보행약자 이동권향상에 기여하는 노인적합 신규모델 개발



캐너란 앱 사용법, 안전교육 등을 실시하면 현장에 나가실 준비가 일차적으로 되신 거죠.

Q. 기관들이 처음 추진하려면 참여자 모집 후 교육은 어떻게 해야 하나 좀 막막할 것도 같은데요.

송가영 23년도 시범사업 참여시 제공된 직무매뉴얼이 있었고, 해당 앱을 개발한 기업에서 교육자료도 제공하니까 필요 내용만 발췌해서 보면 괜찮거든요. 출입문도 여닫이인지, 자동문인지 등 다양한 정보 데이터도 어떻게 분류하는지 알려주고, 건물 내 화장실 정보 등도 어떻게 입력하고 수정하는지도 자세히 설명이 되어 있어 활용이 편리합니다.

물론 선발 후 어플리케이션 사용 교육을 실시하긴 하지만 기본적으로 사용을 잘 하시는 분들로 선발해야 사업이 원활히 운영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 사업도 참여자 선발 후 노인일자리사업 운영안내의 전반적인 틀에 맞춰 운영을 해야 하는데요. 직무교육을 하고, 건물정보, 보행정보 등을 입력하기 위한 로드스

Q. 여러 노인일자리가 있는데 어떻게 이 사업에 참여하게 되셨나요?

윤용기 지난 해 스마트폰 앱을 보다가 5060 우대일자리 찾기관 정보를 보고 신청하게 되었습니다.

보행로 정보 수집 전문가 참여자 교육내용

교육과정 개발 및 참여자 교육

교육내용 보행로정보수집의 이해와 필요성, 보행로정보수집 기능이해, 현장실습

운영시기 '23년 6월(지역별 운영시기 상이)

교육시간 총 6시간(직무교육 6시간)

운영기관 한국노인인력개발원, 엘비에스테크



보행로 정보 수집 전문가 양성 교육과정

| 시간 | 내용 | 강사 |
|-------------|--------|--------|
| 09:00~10:00 | 1시간 | 엘비에스테크 |
| 10:00~12:00 | 2시간 | |
| 13:00~13:30 | 30분 | |
| 13:30~16:00 | 2시간30분 | |

Q. 고령자는 스마트폰을 잘 다루지 못할 거라는 선입견이 있는데, 노인일자리 참여 전 어떠한 일들을 하셨나요?

윤용기 퇴직 후 코로나19 전에 중국에서 물건을 사와 국내에서 인터넷 쇼핑물도 운영해보고, 그러면서 CS 관리도 하면서 휴대폰을 더 잘 다룰 수 있게 됐어요.

Q. 보행로 정보 수집은 어떻게 하는 건지 궁금합니다.

윤용기 올해 2월부터 월~금요일마다 아침 9~12시 3시간 동안 일하는데요. 휴대폰에 로드스캐너 앱을 이용하여 도보로 건물이나 보행정보를 수집하는 것이 주된 활동 내용입니다.

Q. 일하시면서 어려움이나 에피소드가 있을까요?

윤용기 여기 서울은 주차장소가 많이 부족하잖아요. 그래서 보행 정보 수집 시 주차단속원으로 오해해서 불만도 표출하는 그런 일들이 있었습니다. 또 날씨가 춥고, 덥고 이런 어려움 외에는 큰 어려움은 없었습니다.

Q. 앞으로 참여를 희망하시는 다른 분들에게 조언해주신다면?

윤용기 수집한 정보를 지체장애인 등 활용할 사람들을 생각해서 침착하고 정교한 앱 사용이 중요합니다. 출입문은 미닫이문인지, 미는 문인지, 또 계단은 턱이 어느 정도 있는지 파악해서 입력해야 하는 거죠. 그리고 사진 촬영도 사진이 과장되지 않게 찍힐 수 있도록 해야 하죠.



**Q. 노인일자리 참여를 하면서 어떤 점이 좋으실까요?
가족 등 주변 반응이 궁금합니다.**

윤용기 아무래도 연금 외 소득이 생기니까 좀더 나은 문화생활도 누릴 수 있다는 점이 제일 좋고요. 노인일자리 수입이 있으니 아내한테 용돈을 안 받아도 되잖아요. 집사람도 좋아하고 친구들도 부러워하고 많이 축하해줬습니다.

Q. 사업담당자로서 하고 싶은 이야기가 있다면?

송가영 어르신들이 근무하실 때 건물 보행로 정보를 휴대폰으로 촬영하며 다니시니까 건물 내 관계자들이 나와 물어보는 경우가 많아요. 왜 남의 건물을 찍고 다니냐 하면서 경계의 시선으로 물어보는데요. 그럴 때면 참여자분들이 사업 취지나 설명을 드리면서 촬영해도 되는지 양해를 구하면 대부분 이해하시고 좋은 일 하신다고 흔쾌히 찍으라고 허용합니다. 앞으로도 보행로 정보수집 전문가 사업이 많이 알려져서 많은 분들이 협조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노인일자리사업’은 어떤 의미를 갖나요?

보행로 정보 수집 사업 참여자들이 갖춰야 하는 자세처럼 차분하고 담담하게 대답해주셨던 윤영기 참여자께 노인일자리사업이 참여자에게 어떤 의미를 갖는지 여쭙 보았다. 윤 어르신은 “수복강녕”이라고 말한다. 노인일자리 참여로 건강하고 오래 살면서 복도 누리고 평안하다는 의미라고 덧붙이신다.

참여자가 언급한 수복강녕, 즉 개인적인 만족뿐만 아니라 본 활동을 통해 더 나은 사회를 만들어가는데 도움을 주는 삶의 보람도 더해져 만족도가 한층 높지 않을까 싶다.

물론 다른 노인일자리사업 중에서도 지역 내 취약계층을 지원하고, 봉사하는 성격의 활동들이 많이 있다.

이중 보행로 정보 수집 전문가 사업은 보행약자들에게 도움을 준다는 점에서 봉사의 의미가 있으면서 내가 사는 지역에서 걸으며 정보수집 등 건강도 덩으로 챙길

수 있다. 다른 거창한 장비 없이 본인 휴대폰 하나만으로.

“누구나 몸이 불편해질 수 있고, 그때 이러한 보행지도가 꼭 필요할 겁니다.”

점차 고령사회가 심화되면서 누구나 장애를 갖게 될 수 있고 휠체어를 다리로써 이용하게 될 수도 있다. 그때 그동안 노인일자리로 구축한 보행지도 네비게이션으로 많은 사람들이 보다 자유롭게 원활히 다닐 수 있을 것이다.

인터뷰를 마치고, 좀더 정확한 자료를 알아보고자 윤 참여자가 정보 수집할 때 쓰신다는 로드스캐너란 앱을 설치해보았다. 이 앱을 통해 일반인도 자원봉사로 참여도 가능한데, 앱 설정시 전동 또는 수동 휠체어, 일반 보행자 등 보행상태, 소속코드 등 설정할 수 있었다.





오늘은 ○○건의 정보를 수집했어요!

윤용기 참여자가 보여주셨던 휴대폰 앱 홈 화면에 나오는 내용이다. 그동안 수집된 건물이나 보행로 정보가 총 몇 건인지 수집 수치를 볼 수 있는데, 활동할 때마다 차곡차곡 쌓이는 데이터가 누군가에게 도움이 될 것이라 생각하니 뿌듯하고 성취감도 드신다고.

시대가 변하고 노인일자리에도 변화가 왔다

아직도 특정장소에서 가야 일할 수 있는 노인일자리가 대다수이겠지만 이렇게 자유로이 휴대폰만 가지고도 활동할 수 있는 점을 볼 때 바뀐 시대상, 즉 어디서든 노트북이나 휴대폰으로 일할 수 있는 점이 노인일자리에도 접목되었다는 점이 신선했다.

“이 기능 아세요? 이걸 이렇게 쓰는 거예요.”

기사 취재 전에 윤 참여자가 활동하는 모습을 보고 이런 저런 이야기를 나누면서 나도 모르던 스마트폰의 기능도 알려주시던 모습에서 나이가 많아도 관심이 있으면 할 수 있다는 것, 살아있는 동안 계속 배워야 한다

는 것을 다시 한번 느낄 수 있었다.

아동기나 청년기 등 특정시기만 학습하는 것이 아니라, 고령자들도 평생학습을 통해 지적인 활동과 사회화를 지속적으로 실시한다면, 노화로 인한 인지기능의 감소를 예방하고,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데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이다.

새 학기, 새로운 출발이 기대되고 설레는 요즈음이다. 한파가 물러가고 본격적으로 노인일자리사업도 출발하는 이때 전국의 노인일자리 참여자분들도 더욱 건강하게 활동하시길 바라본다.

참고문헌

- 김수린 외(2020). 「신노년세대를 위한 노인일자리사업 개편방안 연구」. 한국노인인력개발원.
- 통계청 : 장래인구추계 2022-2072

*본 간행물을 보다 많은 사람들이 접할 수 있도록 영상물로 제작하였고, 해당 영상은 한국노인인력개발원의 유튜브 내 업로드하여 보다 생생하게 볼 수 있다.



고령 사회의 살과 일

발행처

한국노인인력개발원

발행인

김미곤

편집위원장

이인재

편집위원

유태균, 이소정, 손균근, 신우철,
조준행, 박경하, 조홍영, 김문정, 김지민

등록번호

ISSN 2765-2777

발행일

2024년 3월

주소

서울시 중구 세종대로 17(와이즈타워) 19층,
한국노인인력개발원 연구조사부

전화

02-6731-6127

팩스

02-6731-6100

홈페이지

www.kordi.or.kr

웹진

kordi-webzine.co.kr

디자인

(주)케이에스센세이션(02-761-0031)

문의처

한국노인인력개발원 연구조사부
(02-6731-6127)

- <고령사회의 삶과 일>은 한국노인인력개발원 연구조사부에서 발행하는 계간지입니다.
- 본 지에 실린 내용은 한국노인인력개발원 연구조사부의 공식 견해와 다를 수 있습니다.



기다림의 미(味)학, 전통의 깊은 가치

종로&장금이 _ 장체험관 및 장카페

종로노인종합복지관 [장체험관 및 장카페]는 우리 전통장문화를 다양한 세대에게 전수하기 위해 만들어진 노인일자리사업단으로, 총20명의 어르신들이 장문화 전수자로 근무하고 있다.

장카페에서는 국내산 식재료 선정부터 숙성 및 관리까지 전통 방식을 유지하여 최고의 품질과 맛을 보장한 수제전통장 4종(전통된장·참살고추장·전통간장·보리막장)과 수제청 5종(레몬생강·배도라지·백향과·베리베리·살구), 명절 선물세트 등을 만들어 판매하고 있다. 이 카페 공간에서는 어르신들이 직접 만든 수제청 음료와 전통차를 즐길 수 있어 모임 공간으로도 제격이다. 장체험관에서는 다양한 세대들이 친숙하게 전통장을 접할 수 있도록 장 담그는 법과 장을 활용한 음식 레시피를 알려주는 요리 클래스를 함께 진행하며 전통장문화 전승에 이바지하고 있다. 요리 클래스는 체험 메뉴의 종류가 다양하고 공간이 잘 구성되어 있어 고객의 만족도 및 재참여율이 높다. [장체험관 및 장카페]의 모든 상품은 쿠팡, 네이버 스마트스토어 등 온라인을 통해서도 구매가 가능하고, 네이버 플레이스를 통해 요리 클래스의 실시간 예약이 가능하다.

열정 가득한 20명의 어르신들이 만들어가는 [장체험관 및 장카페]가 앞으로도 눈부신 발전과 성장을 이루기를 응원한다.



종로노인종합복지관 종로&장금이



- 주소: 서울시 종로구 율곡로 19길 17-8
종로노인종합복지관 5층
- 문의: 02-742-9500

